

연구보고서 2003-06

# 정부대전청사의 이전 효과 분석

문 경 원(선임연구위원)

## 머 리 말

금년 8월 26일로 정부대전청사가 1998년 대전으로 이주해 온지 5년이 되었다. 정부대전청사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으로 균등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정부대전청사는 이전에 따른 수도권 인구분산 및 국토의 균형발전, 국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정부 및 산하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모델이 될 것이다.

정부대전청사의 대전입지는 대전시민들에게 행정수도라는 시민적 자긍심을 심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전에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 또한 막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정부대전청사의 대전 이전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고는 먼저, 정부대전청사의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통해 정부대전청사의 이전 효과에 대한 실증을 분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이전효과를 개인생활의 변화,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로 나누어 살펴보고, 산업연관분석에 의해 대전에 미치는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통해 고용효과 및 생산효과, 소득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분석해 대전시의 도시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보았습니다.

정부대전청사의 이전 효과 분석이 향후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정부 산하기관의 지방분산에 있어서 좋은 모델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연구 과제를 수행한 문경원 선임연구위원의 노력에 격려를 보냅니다.

2003. 12.

대전발전연구원장 한 연 동

# 요 약

## I. 서 론

- 금년 8월 26일은 정부대전청사가 1998년 대전으로 이주해 온지 5년이 되는 날이다. 정부대전청사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으로 균등한 지역발전 도모하기 위하여 1998년 입주하였으며, 현재 12개 기관에 4,2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 본 연구는 대전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수도권 인구분산 및 국토의 균형발전, 국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정부대전청사의 대전지역 이전 효과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본 연구는 정부대전청사의 입주가 대전에 미친 사회·경제적 이전효과 및 대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대전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 그리고 대전청사 근무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대전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투입산출모형으로 분석해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정부대전청사의 일반적 현황

- 정부대전청사의 건립 배경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을 실현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청단위 행정기능의 집중화로 대민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

- 지난 98년 8월 26일 이주를 완료한 정부 대전청사에는 정식 공무원 4,246명, 비정규직 600여명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편의시설 종사자 등을 합쳐 4,8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 정부대전청사 이전에 따른 최근의 방문객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402천명, 2001년 439천명, 2002년 356천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일반방문객의 경우 연간 근무일수를 300일로 기준할 때 1일 평균 1,187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도시의 관광자원으로서 매력을 갖고 있어 시티투어 등 청사관람의 목적으로도 방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Ⅲ. 대전이전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1. 설문조사의 개요

- 정부대전청사의 대전이전 효과로 인한 사회경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설문조사의 대상은 대전청부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03년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였다. 표본의 크기는 총 600명으로 각 기관별 근무 인원수의 비율로 배분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조사원에 의한 1대 1 직접조사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 표본의 성별은 남자 474명(79.0%), 여자 126명(21.0%)이며, 연령별로는 30대가 280명(46.7%)로 가장 많았다. 가구원 수는 4명이 전체의 4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 중인 학생 수는 초등학교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는 일반 행정직 43.0%, 기술직 37.2%이며, 근무처별로는 특허청, 철도청이 각 23.5%, 26.5%를 차지하고 있다.

## 2. 출근형태 및 주거유형에 관한 사항

- 응답자의 주요 통근 수단은 42.7%가 도보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승용차를 이용한 통근형태는 47.8%를 차지하고 있다. 통근에 따른 소요 시간은 10분 이하가 23.8%, 10-20분 45.7%, 20-30분 17.0%이며, 20분 이하가 전체의 69.5%를 차지하고 있다
- 거주하는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전체의 7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공무원 아파트에 33.8%, 일반 아파트에 42.5%가 거주하고 있다.
-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주거형태는 자가가 48.3%, 전세 39.0%, 월세 5.3%를 보이고 있다. 자가점유비율은 2000년 현재 서울의 41% 수준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 3. 대전이전 이유 및 가족관계

- 정부대전청사가 대전으로 이전(1998년)하기 직전 응답자의 거주지는 서울이 46.7%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1.8%, 17.3% 등 수도권 지역에 65.8%가 거주한 반면에 대전 거주는 15.8%였다.
- 현재 거주지는 97.7%가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인근 충남·북 지역 1.3%, 수도권 지역 0.7%를 보이고 있다.
- 응답자의 82.3%는 정부대전청사가 대전으로 이전한 이후에 대전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대전청사가 이전하기 전부터 대전에 거주한 응답자의 비율도 17.7%를 보이고 있다.
- 대전으로 이전한 가장 큰 이유는 직장이동에 따른 직장과의 근접성 때문이라는 응답이 95.4%를 차지하고 있어 직장이 주거이동(residential

mobility)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이주할 의사는 없다가 48.5%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되면 수도권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17.8%, 직장이 변동된다면 수도권으로 이사할 것 같다가 24.7%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의 재이주 의사가 42.5%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이사하고 싶은 이유는 직장변동의 가능성이 55.1%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 직장이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함께 이주한 동반자를 보면, 가족 모두가 이주했다가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혼자만 이주한 경우도 32.1%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가족이 대전으로 이주한 경우 가족 구성원은 4인 가구가 55.9%로 가장 높았으며, 3인 가구 19.7%, 5인 가구 11.2%, 2인 가구 10.1% 순을 보이고 있다.

#### 4. 대전 이전시 관련 효과

-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하여 대전 생활의 장점으로서는 출·퇴근 시간의 감소가 57.9%로 가장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가격 16.0%, 쾌적한 생활환경 11.4%, 가족과의 공유시간 확대 8.5% 순을 보이고 있다.
- 대전이전에 따른 생활상의 불편한 점으로는 불편사항이 없다는 의견이 29.5%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불편한 점으로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부족 24.9%, 교육기회 부족 18.9%, 여가오락 공간의 부족 9.5%, 교통의 불편함 7.9%, 가족과의 주말 생활 4.4% 순으로 나타났다.
- 서울에 비해 문화예술 향유기회의 부족은 내년 4월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서울로의 공연 관람회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 대전이전에 따라 업무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으로는 서울로의 출장시간 과다가 30.7%로 가장 높아, 이는 서울로의 빈번한 출장으로 인한 업무 공백의 우려를 낳고 있다.
- 정부대전청사가 대전에 미치는 효과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40.5%가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 산업 성장에 따른 지역 상권 확대를 들고 있으며, 이는 대전청사주변이 밤낮없이 생기 넘치는 도심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내방객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 정부대전청사의 대전 이전으로 소기의 목표를 가장 크게 달성한 것으로 국토균형발전이 43.2%로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 인구분산 35.7%, 청 단위 기관의 집중배치에 따른 업무능률 향상 12.7% 순으로 나타났다.
- 직원들의 급여 지출사항을 대전 시내에서의 지출과 대전시외에서의 지출 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월 급여의 81.7%가 대전시내에서 음·식료품비, 교육비, 문화·여가비, 주거비, 저축 등에 사용되고 있다.
- 지출현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금융기관 저축이 18.5%, 음·식료품비 16.7%, 주거·광열·의료비 13.2%, 교육비 11.9%, 문화·여가비 9.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전시외지역에서는 월 급여의 18.3%가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향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도시발전의 방향

- 정부대전청사의 대전이전을 계기로 정부 및 산하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40.8%가 필요한 편이다. 33.7%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해 전체의 74.5%가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 정부 및 산하기관의 지방이전이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지방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도움이 된다 34.8%, 도움이 되

는 편이다 43.8%로 77.8%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 향후 대전시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도시발전의 방향에 대한 응답은 쾌적한 환경친화적 주거도시의 형성이 38.8%로 가장 높았으며, 우수한 교육여건이 구비된 교육·연구도시 25.3%, 종합 행정중심도시 18.2%, 첨단산업이 중심이 된 첨단산업도시 7.2%, 문화예술도시 2.7% 순으로 나타났다.

#### IV. 정부대전청사의 이전효과

- 정부대전청사의 이전효과를 개인생활의 변화, 대전시 관련 효과, 지역 경제과급효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대전시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공무원 개인생활에 미친 효과

###### 가. 출·퇴근과 주거생활

- 정부대전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출퇴근 시간의 감소는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한 이유가 되며 가족과의 사랑을 확인하고 대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이 서울 생활과 비교해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정부대전청사 이전 이후 대전청사 공무원들의 대전 정착은 매년 증가해, 약 98%가 대전으로 이주해 왔다. 이 중 80% 이상이 결혼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1가구를 4인 가족으로 기준한다면 정부 대전 대전청사로 유입된 공무원 가족 수는 약 14,100명이다.
- 그러나 응답자들의 42.5%가 여건이 허락된다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으로의 재이주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이주할 의사가 없다는 48.5%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다시 이사할 의사가 있는 주된 이유로는 직장변동의 가능성과 가족과의 관계, 대전교육환경의 불량, 대전의 생활·문화·쇼핑여건의 불편 등을 들고 있다.

#### 나. 대전생활의 장·단점

- 대전청사로 이주한 공무원들은 대전생활의 장점으로 무엇보다도 출·퇴근시간의 감소를 꼽고 있으며, 반면에 불편한 점으로는 문화예술 향유기회의 부족을 들고 있다.
- 현재 대전시에서는 시민문화향유기회의 제공과 확대를 위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예술작품 공연·전시를 통해 시민 문화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창조하고 누리는 쌍방적 문화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금년에 개관한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의 건립을 계기로 이러한 대전의 문화예술공연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 한편 대전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업무시 느끼는 불편한 점으로는 서울로의 출장시간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가족과의 별거생활을 다음 순위로 들고 있다.
- 대전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수도권으로의 잦은 출장을 들고 있다. 정부대전청사 간부급 공무원들은 서울 출장이 잦은 이유로 ‘업무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권력이 지나치게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 출장이 잦아짐에 따라 9개 대전청사 기획부서 공무원들은 2002년에 절반가량을 서울에서 근무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출장의 반복으로

내부 업무의 차질과 건강에도 적신호가 오는 경우도 있다.

## 2.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

### 가. 인구증가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 정부대전청사의 입지가 대전지역에 미치는 효과로는 대전시의 인구증가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인구증가의 경우 대전은 청사가 이전한 1998년 1,345,684명에서 2002년말 1,424,844명으로 8만여명 증가했다.
- 특히, 정부대전청사가 입지한 대전광역시 서구의 인구증가 요인 중 사회적요인의 증가수준이 대전광역시 전체의 사회적 인구증가(시도간 인구가동 기준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도 24.8%, 1991년도 26.0%, 1992년도 30.8%, 1993년도 35.9%로 지속적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청사이전과 관련해 둔산신시가지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만년동, 월평동, 둔산동 등지에 대규모 주택지와 상업지가 조성되었고, 간선도로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었다.
- 대전청사 이전의 건립목적인 수도권인구분산, 국토의 균형발전의 도모 여부에 대해서는 43.2%가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으며, 수도권인구분산이라는 측면에도 35.7%가 응답하고 있다.
- 그러나 국가의 중추기능의 지방분산을 통한 수도권인구 및 경제력 집중 완화 효과는 기대했던 만큼의 실효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 대전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월 급여 중 81.7%를 대전시내에서

지출하고 있으며, 그 중 금융기관 저축, 음·식료품비, 주거·광열·의료비 13.2%, 교육비 11.9%, 문화·여가비 9.0% 순으로 지출하며, 월급여의 18.3%를 대전시의 지역에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3년 현재 대전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는 4,246명이며, 2003년도 총 인건비는 195,943백만원으로 조사되었다.
- 이를 기준으로 볼 때 1인당 월 평균 3,846,000원으로 이 중 81.7%가 대전시내에서 지출되는 경비로 3,142,000원이며, 대전시의 지역으로 지출되는 인건비는 18.3%로 월 704,000원으로 나타났다.

#### 다.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파급효과 분석

- 대전으로 이전한 현 대전정부청사에 근무하는 종사자수는 모두 4,324명이며, 이들 종사자의 2003년도 전체 인건비(소득) 규모는 1,969억 7,3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전체 소득액 가운데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비율이 약 81.7%로 나타났다.
- 결국 2003년도 한 해 동안 대전정부청사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대전 지역에서 지출한 소비지출 규모는 1,609억 2,700만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따라서 대전정부청사의 대전이전으로 대전지역 공공부문 종사자수가 신규로 4,246명 증가하고, 청사이전에 따른 신규 지역내 소득증가의 발생과 이에 따른 최종수요에 해당하는 신규 소비지출 규모가 증가하는 등 정부대전청사의 이전은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2003년 11월말 현재 기준 종사자수 및 인건비(소득)를 기준으로 한 직접고용효과는 4,246명이며, 지역내 타산업부문에 미친 간접고용효과 6,984명을 합한 총고용 효과는 11,230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청사이전에 따른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직접생산효과는 1,876억4,300만원이며, 간접생산효과는 공공부문 고용증가에 따른 생산증가가 타산업 분야에 간접으로 미친 생산유발효과 1,008억5,900만원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공공부문 소득증가에 따라 발생한 지역내 소비증가(최종수요)가 가져온 생산유발효과 2,659억4,800만원으로 직접 및 간접생산효과를 합한 총 생산유발효과는 5,544억5,000만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전정부청사 종사자들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청사이전에 따른 지역내 신규 소득증대는 2003년도 인건비 1,969억7,300만원(직접소득)과 전산업부문의 소득에 미친 간접소득 1,386억1,300만원을 합한 3,355억8,600만원으로 분석되었다.
-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신규 고용증가와 이에 따른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산출증가 결과 나타난 지역내 신규 부가가치 발생 총액은 공공부문으로부터 발생한 직접부가가치 975억3,700만원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지역내 타산업부문에 미친 산출증가 결과 나타난 간접부가가치 유발액 1,906억6,600만원을 합한 지역내 총부가가치 유발액 2,882억300만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라. 향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대전시 도시발전방향

- 정부대전청사 이전을 계기로 40.8%가 정부 및 산하기관 지방이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수도권외의 과밀해소와 지방의 발전이 도모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77.8%를 차지하고 있다.
- 또한 지방으로 이전한 공무원을 위한 이전 지역에 대한 생활여건의 편리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대전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향후 대전시가 쾌적한 환경친화적 도

시, 우수한 교육여건이 구비된 교육·연구도시, 종합 행정중심도시로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다.

- 국가의 중추기능의 지방 분산을 통한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고자 목적을 갖고 추진한 둔산 신도시개발 및 정부대전청사 이전은 기대했던 만큼의 실효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왜냐하면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정부대전청사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지역발전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공공기관의 나 홀로 이전만이 이루어졌을 뿐 유관기관의 이전은 그리 많지 않았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 그 자체로도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시키는 데는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차 례

<b>I. 서 론</b> .....	1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3
2. 연구의 구성 .....	5
<b>II. 정부대전청사의 일반적 현황</b> .....	7
1. 국가행정기관 이전계획 .....	9
2. 대전정부청사의 일반현황 .....	16
3. 정부대전청사의 이용자 분석 .....	22
<b>III. 정부대전청사 이전효과에 대한 실증분석</b> .....	27
1. 설문조사의 개요 .....	29
2. 설문조사 분석 .....	32
가. 일반사항 .....	32
나. 출근형태 및 주거유형에 관한 사항 .....	37
다. 대전이전 이유 및 가족관계 .....	41
라. 대전 이전시 관련 효과 .....	50
마. 향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도시발전의 방향 .....	60
<b>IV. 정부대전청사의 이전효과</b> .....	67
1. 공무원 개인생활에 미친 효과 .....	69

가. 출·퇴근 및 주거생활 .....	69
나. 정주생활의 변화 .....	70
다. 생활의 장·단점 .....	72
2. 지역에 미친 효과 .....	73
가. 인구 증가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	73
나. 소비지출형태 .....	76
다.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파급 효과 .....	77
<b>V. 결 어</b> .....	<b>83</b>
〈참 고 문 헌〉 .....	89
〈설문조사서〉 .....	91

## 표 차 례

〈표 II - 1〉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시책 현황 .....	12
〈표 II - 2〉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 .....	13
〈표 II - 3〉 기관별 이전현황 .....	15
〈표 II - 4〉 정부대전청사 근무인원 .....	18
〈표 II - 5〉 기관별 주요 업무 .....	19
〈표 II - 6〉 일반 방문객 현황(2002년도) .....	22
〈표 II - 7〉 각 기관별 방문인원 .....	23
〈표 II - 8〉 2002년 단체방문객 현황 .....	25
〈표 II - 9〉 연도별 이용인원 추이 .....	25
〈표 II - 10〉 각 전시관별 이용인원(2002년도) .....	26
〈표 III - 1〉 정부대전청사 설문조사 표본수 .....	30
〈표 III - 2〉 설문조사 내용 .....	31
〈표 III - 3〉 응답자 성별 .....	32
〈표 III - 4〉 성별과 연령 .....	32
〈표 III - 5〉 응답자 연령 .....	33
〈표 III - 6〉 응답자 가구원수 .....	33
〈표 III - 7〉 성별과 가구원수 .....	33
〈표 III - 8〉 교육중인 학생수 .....	34
〈표 III - 9〉 직렬(업무분야) .....	35
〈표 III - 10〉 근무처와 직렬 .....	36
〈표 III - 11〉 근무처 .....	37
〈표 III - 12〉 출근시 주요 통근수단 .....	38
〈표 III - 13〉 통근 소요시간 .....	38
〈표 III - 14〉 거주 주택유형 .....	40



<표 III-15> 주택의 주거형태 .....	40
<표 III-16> 정부대전청사 이전하기 직전 거주지 .....	41
<표 III-17> 현재 거주지 .....	43
<표 III-18>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의 통근 이유 .....	43
<표 III-19> 대전이전 시기 .....	43
<표 III-20> 대전 이전 이유 .....	44
<표 III-21>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재 이주 의사 .....	44
<표 III-22>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재 이사 이유 .....	45
<표 III-23> 대전 이주시 동반 이주자 .....	46
<표 III-24> 가족 모두 이주한 이유 .....	47
<표 III-25> 가족 일부만 이주한 이유 .....	48
<표 III-26> 가족 일부 이주한 경우 이주한 가족수 .....	49
<표 III-27> 대전 생활상의 장점 .....	50
<표 III-28> 대전 생활의 불편한 점 .....	53
<표 III-29> 청사의 대전이전에 따른 업무상 불편한 점 .....	56
<표 III-30> 정부대전청사의 지역영향 효과 .....	57
<표 III-31> 정부대전청사의 기대효과 달성 .....	58
<표 III-32>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59
<표 III-33> 정부 및 산하기관의 지방이전 필요성 .....	61
<표 III-34> 정부 및 산하기관의 지방이전과 지방발전 .....	62
<표 III-35> 이전 공무원의 우대방법 .....	63
<표 III-36> 대전시의 도시발전 방향 .....	64
<표 IV - 1> 대전시 공동주택현황(2003. 1. 31현재) .....	70
<표 IV - 2> 샘머리아파트 현황 .....	70
<표 IV - 3> 시도별 주민등록인구 .....	74
<표 IV - 4> 정부대전청사 종사자수 및 인건비(2003년 기준) .....	78
<표 IV - 5> 정부대전청사 이전에 따른 대전지역으로의 경제적 파급효과 .....	80

## 그 립 차 례

〈그림 I -1〉 연구 수행도 .....	6
〈그림 II -1〉 각 기관별 방문인원 .....	24
〈그림 III -1〉 업무분야 .....	35
〈그림 III -2〉 통근수단 .....	38
〈그림 III -3〉 통근 소요 수단 .....	39
〈그림 III -4〉 주택유형 .....	40
〈그림 III -5〉 주거형태 .....	41
〈그림 III -6〉 이전 거주지역 .....	42
〈그림 III -7〉 수도권으로의 재이주 의사 .....	45
〈그림 III -8〉 수도권으로 이사하고 싶은 이유 .....	46
〈그림 III -9〉 이주 가족 구성 .....	47
〈그림 III-10〉 가족 모두 이주한 이유 .....	48
〈그림 III-11〉 가족의 일부만 이주한 이유 .....	49
〈그림 III-12〉 가족 수 .....	50
〈그림 III-13〉 대전생활의 장점 .....	51
〈그림 III-14〉 이전에 따른 생활의 불편한 점 .....	53
〈그림 III-15〉 이전에 따른 업무상 불편한 점 .....	56
〈그림 III-16〉 청사 이전의 주요 효과 .....	57
〈그림 III-17〉 청사 이전 성과 .....	58
〈그림 III-18〉 청사이전의 필요성 .....	61
〈그림 III-19〉 청사 이전 효과 .....	62
〈그림 III-20〉 이전 공무원 우대책 .....	64
〈그림 III-21〉 대전발전의 방향 .....	65
〈그림 IV -1〉 서구의 세대 수 증가 .....	75

# I. 서 론

##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1964년 건설부가 발표한 「대도시인구집중방지책」이 시초로서 관공서의 지방이전을 제시하였는데, 지방과 관계된 연구 및 실험시설, 지방관련 농업관계시설과 군사시설의 지방이전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나 실행되지는 않았다.
- 이후 정부는 1969년 「대도시인구 및 시설의 조정대책」, 1970년 「수도권인구과밀억제에 관한 기본지침」, 1971년에 수립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72년 「대도시인구분산시책」, 1973년 「대도시 인구분산책」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구상을 발표하였다.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수도권정책 중 주요과제의 하나로 추진하였다.
  - 정부는 1960년대 이래 수도권 인구집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제조업시설, 행정기관, 교육기관 등의 지방이전을 구상하였다.
  - 특히 1973년부터는 공공청사의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으나, 이러한 시책은 대부분 실행되지 못했다.
- 수도권 공공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시책은 1977년 제1무임소장관실에서 발표한 수도권인구재배치기본계획이며, 그 이후 이 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과 국토종합개발계획 등에 반영되어 구체화되었다.
- 그러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일부 정부투자기관의 대전으로의 이전과 대전의 대덕연구단지로 이전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대부분으로 정부 부속기관은 수도권내에서 대부분 재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 대전 둔산지구의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한 청 단위기관 9개를 포함한 10개 기관의 경우 수도권 인구의 분산은 물론이고, 대전권의 인구성장과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 정부대전청사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신시가지내에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년간에 걸쳐 총공사비 4,025억원을 투입하여 159,043평인 청사부지에 지상 20층 규모의 4개 사무동 및 지상 2층의 부속동 등 연건평 67,582평의 규모로 1998년 건립되었다.
- 당시 이전기관은 국무회의 구성원이 아닌 9개 청단위 중앙행정기관과 총무처 부속기관인 정부기록보존소 등 10개 기관으로 직원 수는 약 4,000명 수준이었다.
- 그러나 현재까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실질적인 노력에 비하여 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물리적 시설인 공공청사만을 이전하는 데 중점을 두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금년 8월 26일은 정부대전청사가 1998년 대전으로 이주해 온지 5년이 되는 날이다. 이주 당시만 해도 이주 대상기관으로 분류된 외청들은 이전을 피하기 위해 로비를 벌였으며 이주가 확정된 외청의 공무원들은 유배지로 떠나는 것 같은 분위기속에서 대전으로의 이주를 받아 들였다.<sup>1)</sup>
  -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판이하게 양상이 달라져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발령이 나지 않도록 하소연을 하고 있는가 하면 대전으로의 이주율이 이미 95%를 넘어섰을 정도다.
- 정부대전청사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으로 균등한 지역발전 도모하기 위하여 1998년 입주를 하였으며, 현재 정부 대전청사에는 12개 기관에 4,200여명이 근무

1) 대전일보, 2003. 8. 22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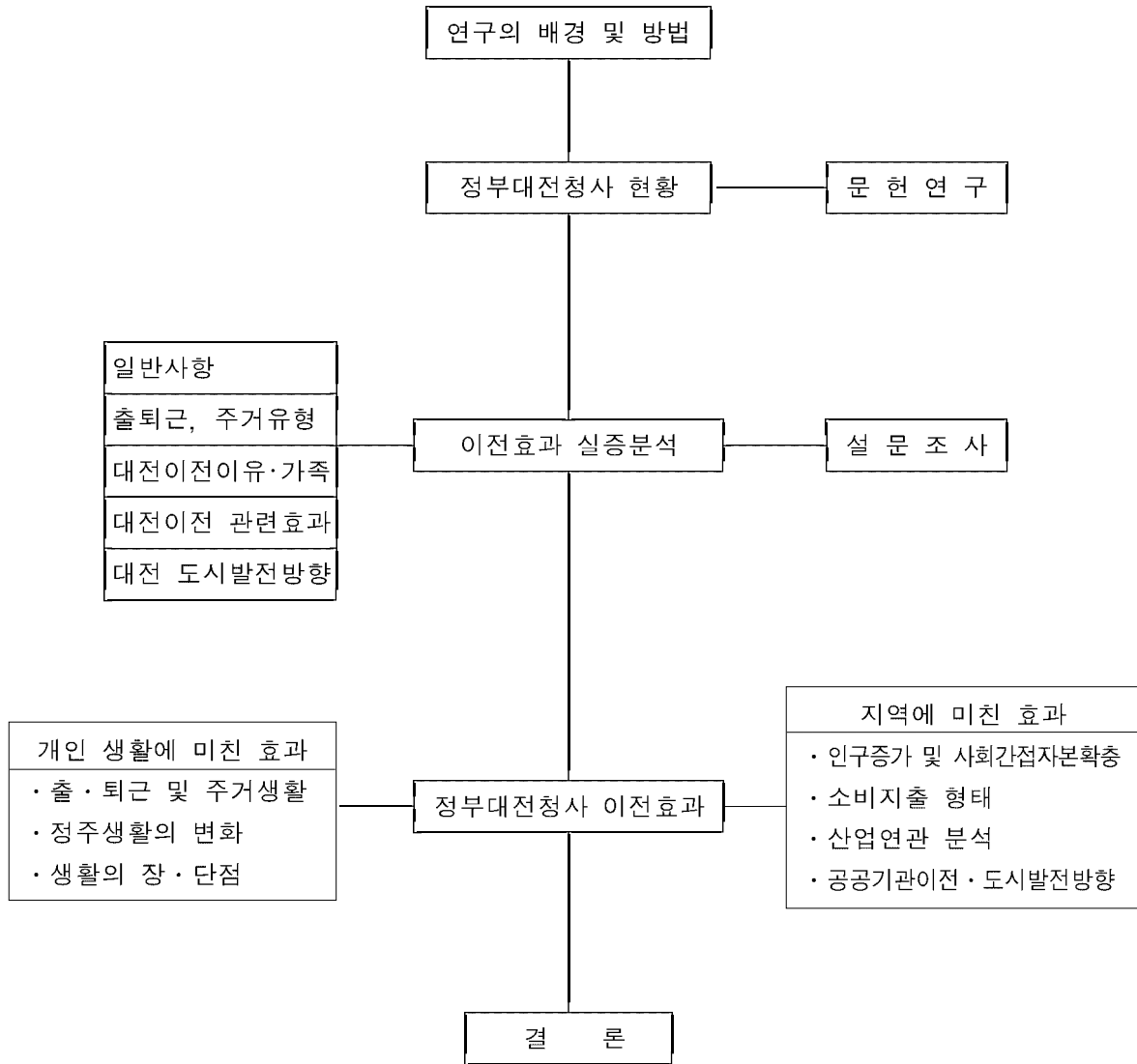
무하고 있다. 대전 이전 5년을 맞이하여 정부대전청사는 최근 신행정 수도의 충청권 이전계획과 맞물려 '대전드림'을 만들어가고 있다.

- 본 연구는 수도권 인구분산 및 국토의 균형발전, 국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 향상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정부대전청사가 대전 지역에 미친 이전 효과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정부대전청사의 이전 효과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는 정부대전청사의 입주자 대전에 미친 사회·경제적 이전효과 및 대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춰 대전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 그리고 대전청사 근무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대전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투입산출모형을 통해 분석해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구성

- 본 연구는 총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은 정부대전청사의 일반적 현황으로서 국가행정계획의 이전계획, 대전정부청사의 일반현황 및 이용자 분석을 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정부대전청사의 이전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응답자의 출근형태 및 주거 유형, 대전 이전 이유 및 가족관계, 대전 이전시 관련 효과, 향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도시발전의 방향 등을 분석하였다.
- 제Ⅳ장에서는 정부대전청사의 이전효과를 개인생활의 변화,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 지역경제파급효과,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효과분석,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대전시 도시 발전 방향 등으로 구분하여 그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했다.

○ 이러한 연구범위와 방법의 수행과정을 정리하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 수행도

## II. 정부대전청사의 일반적 현황

### 1. 국가행정기관 이전 계획(대전 제3청사 건설계획)

- 1989년 4월 27일, 청와대에 지역균형발전기획단(대통령비서실 소속)이 발족되면서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방도시의 체계적 개발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이 1989년 하반기에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 이에 의하면 중앙부처를 포함하여 지방에서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기관은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을 추진하며,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예외 없이 지방에 설치한다는 내용이었다.
- 그리고 신설공공기관의 지방입지화 추진지침을 대통령훈령으로 조치하고, 정부기관의 이전과 병행하여 공공법인 및 단체의 지방이전도 적극 유도한다는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지역균형발전기획단, 1989).
- 이에 따라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92~2001)에서도 수도권내 공공기관 등의 단계적인 지방분산 촉진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 1990년 9월에는 청 단위(11개 청) 중앙행정기관 대전이전계획을 확정하여 1998년에 관련 청 단위 기관의 대전 둔산단지 입주를 완료하였다.
  - 대전의 둔산단지개발계획은 지방거점도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전으로의 국가행정기관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계획이었다.

## 가. 국가행정기관 지방이전 계획

-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1964년에 건설부가 발표한 대도시인구집중방지책이 시초였다.
  - 주요내용으로 연구 및 실험시설, 지방관련 농업관계시설과 군시설의 지방 이전이 포함되었으나 실행되지는 않았다. 1969년의 대도시인구 및 시설의 조정대책, 1970년의 수도권인구과밀억제에 관한 기본지침, 1971년에 수립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72년 대도시인구분산시책, 1973년의 대도시인구분산책 등이다.
-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실질적으로 시행한 시책은 1973년 경제기획원에서 수립한 대도시인구방지책이었다. 이는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을 위한 제1차 이전계획이었다.
  - 이 계획에서는 서울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기존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할 목적으로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하였다.
  - 이전대상기관은 22개 정부기관과 23개 국영기업체이었다. 1차 이전계획에 따른 이전은 서울, 특히 강북 도심에 입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1973년부터 이전을 추진하였는데, 제1차 이전계획(1973)에 의거 45개 대상기관 중 35개 기관이 이전하였으나, 이 중 5개 기관은 일부가 민영화되면서 서울로 재복귀하였다.
- 이 계획에 따라 1973년부터 1979년까지 7년간 13개 정부기관과 13개 국영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하였는데, 그 선정 기준을 보면, 이전의 용이성과 대상기관의 기능 및 인구 흡인효과가 큰 기관이며, 13개 정부기관과 국영기업체인 토지개발공사를 이전토록 하였다.
  - 제2차 이전계획(1980)을 통해서는 14개 대상기관 중 8개 기관이 이전하였는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6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립지리원, 국사편찬위원회 등 2개 정부부속기관이 이전하였다.



- 그리고 3차 이전계획은 1985년 총무처가 마련하였으며, 그 선정기준은 기능이 특정분야 타기관과 연계가 적은 기관이며, 지방입지가 효율적인 기관이었다.
  - 이에 따라 전매청 등 1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 일부를 수정하여 9개청 단위기관을 대전 제3청사로 이전하는 계획이었다.
- 그리고 3차이전계획수정(총무처 1990. 9)에서는 청단위 기관 중 수도권과 연계가 적은 기관으로 이전대상지역으로 대전둔산지구 제3청사로 정했으며, 철도청 등 11개 기관(이후 9청 10개 기관)을 이전 대상기관으로 하였다.

<표 II-1>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 현황

시책구분	시책내용
대도시인구집중방지책 (건설부,1964.9.22)	- 관공서의 지방이전(지방과 관계된 연구 및 실험시설, 지방관련 농업관계시설과 군시설의 지방이전)
대도시인구 및 시설의 조정대책 (무임소장관실,1969.12.29)	- 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 정부기관 및 산하정부기업체 본사의 지방이전
수도권인구과밀억제에 관한 기본지침(건설부,1970.4.3)	- 중앙관서·국영기업의 지방분산 - 행정권한의 지방관서이양
제1차국토종합개발계획 (건설부,1972-1981)	- 수도에 위치할 필요가 없는 국영기업체 본사의 지방연고지분산
대도시인구분산시책 (청와대,1972.9.12)	- 정책·법령·예산·방침·기준에 관한 사무의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 2차관서, 교육시험연구기관, 국영기업체, 군기관의 지방이전
대도시인구분산책 (경제기획원,1973.3.5)	- 국영기업체 및 일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인구소산계획 (서울시,1975.5.29)	-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한수 이남 및 지방분산
수도권인구재배치기본계획 (1977.3.16)	- 정부청사및 국영기업체 사옥의 서울시내 신증축 잠정금지
임시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1977.7.23)	- 임시행정수도 건설
수도권내 공공청사 및 대규모건축물규제계획(1982.5.13)	- 정부기관청사,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인, 정부출자기업체 본사, 법률로 지원을 받는 법인청사의 신증축은 원칙적으로 금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건설부,1992-2001)	- 수도권내 공공기관과 대학 등의 단계적 지방분산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경제기획원,1992-1996)	- 이미 확정된 廳단위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 수도권내 입지 필요성이 적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가능성 검토
신경제5개년계획 (경제기획원,1993-1997)	- 11개 청 단위의 정부기관 이전을 차질없이 완료 - 추가이전계획을 마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속 추진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건설교통부,1997.6)	- 특정 업무분야, 지방과 관련이 많은 기관,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과 관련이 있는 공공단체의 지방이전을 유도 - 청단위 기관의 대전둔산지역으로의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그 부속기관도 이전을 검토

<표 II-2>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구 분	추진배경	선정기준	이전대상지역	이전대상기관
1차 이전계획 (경제기획원, 1973·3)	-대도시 인구분 산책	-이전이 용이하고 이전 비용이 적게 드는 기관 -운영상 이전이 합리적 인 기관	-지방에 대지 및 건물보유지역 -업무상 상호연관 기관은 동일지역	-법무연수원 등 22개 정부기관 -한국도로공사 등 23개 국영기업체
2차 이전계획 (무임소장관실→경 제기획원, 1980·3)	-수도권문제 보 고시 국무총리 지시	-이전의 용이성 -대상기관의 기능 및 인구 흡인효과가 큰 기관	-과천 등 수도권 에 7개 기관 -대덕 등 수도권 외에 7개 기관	-국립지리원 등 13개 정부기관 -토지개발공사
3차 이전계획 (총무처, 1985·11)	-국토균형발전 과 수도권인구 소산	-기능이 특정분야 타기 관과 연계가 적은 기관 -지방입지가 효율적인 기관	-대전 등 중부권	-전매청 등 13개 중앙 행정기관
3차이전계획 수정 (총무처 1990·9)	-지역균형발전	-廳단위기관 중 수도 권과 연계가 적은 기관	-대전 둔산지구 제3청사	-철도청 등 11개 기관(이후 9청 등 10개 기관)

자료 : 박헌주 김광익, 수도권정책의 현안과제와 개선방안, 1997, p. 25

#### 나. 대전 제3청사 이전

- 제3차 이전계획은 1985년 총무처가 마련하였으며, 전매청 등 1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제3차 이전계획(1985)을 통해서 13개 기관 중 한국담배인삼공사 1개 기관만 이전하였다.
- 이렇듯 3차에 걸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실적이 부진하자 3차 이전계획의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수정계획에서는 9개 청 단위기관을 대전 제3청사로 이전토록 하였다.
-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제3차 이전계획의 수정계획(1990)을 통해 청단위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계획안이 확정되었으며, 정부에서는 대전 정부 제3청사 건립사업 시행을 확정하였다.

- 이전대상기관은 10개 기관(당초 11개 기관에서 해운항만청은 해양수산부의 신설로 제외)으로(공무원 수 4,103명) 확정되었다.
- 정부 대전청사의 건립기간은 1993년 9월에서 1997년 12월까지 5년간이다. 규모는 11개 기관 4,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부지 159천여 평에 건물연면적 68천평으로 20층 높이의 건물 4개 동을 신축하며 여기에 4,000여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 정부 대전청사의 공사비는 구청사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의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정부 대전청사의 추진은 1989년 1월 수도권실무기획단이 발족한 후 동년 2월 대통령 지방순방시 제2행정수도의 육성을 약속하면서 본격화되었다.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방안은 대통령의 지방순방 직후인 1989년 4월 27일에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설치하고 지역균형발전시책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었다.
- 1990년 9월 국무회의에서 청단위 중앙행정기관 대전이전계획안을 확정하였고, 정부 대전청사 설계공모 공고(1991. 6)와 설계당선작 선정 공고(1991. 11)를 신속히 진행하였다.
- 정부에서는 청사이전에 따른 채용조달 및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법을 제정(1991. 12)하였다. 청사부지는 대전시와 협의를 통하여 둔산택지개발지구 내에 입지하도록 하고, 1991년 12월 부지매입계약을 완료하였다.
- 정부대전청사는 1993년 9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5년 동안의 건설기간을 거쳐 1997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1998년에 9개 청단위 기관과 정부기록보존소 등 10개 기관이 대전의 둔산단지로 이전 완료하였다. 청단

위의 이전기관은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산림청, 중소기업청(중기청), 특허청, 철도청, 통계청, 문화재청이다.<sup>2)</sup>

<표 II-3> 기관별 이전현황

등 별	기 관 명	이 전 기 관	인 원(명)	물 량(톤)
1동	산림청	8.10 ~ 8.11	199	208
	중소기업청	7.30 ~ 7.31	233	173
	문화재관리국	8. 5 ~ 8. 7	188	200
	관세청	8.22 ~ 8.26	324	436
2동	철도청	7.31 ~ 8. 4	636	475
	정부기록보존소	7.28 ~ 7.29	125	265
3동	병무청	8. 2 ~ 8. 5	225	192
	통계청	7.25 ~ 7.29	405	732
	조달청	8. 9 ~ 8.14	533	448
4동	특허청	7.27 ~ 8.11	866	2,529

자료: 정부대전청사관리소, 대전청사현황(내부자료)

2) 이전일정은 1998. 5. 25~1998. 8. 26일로, 1998. 7. 25 통계청을 시작으로 하여 8. 26 관세청을 끝으로 이전 완료하였으며, 이전기관 : 관세청 등 10개 기관 3,870명, 이전화물 5,650톤이었음

## 2. 정부대전청사의 일반현황

### 가. 정부대전청사의 건립배경과 연혁

- 정부대전청사의 건립 배경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 도모하고, 청단위 행정기능의 집중화로 대민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
- 또한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 신축으로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구조물의 체계적 배치로 기관의 기능성을 극대화해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
- 정부대전청사의 건립연혁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989. 1 : 수도권대책실무기획단 발족
- 1990. 9 : 청단위 중앙행정기관 대전이전 계획 확정
- 1991. 6 : 정부대전청사 설계 공모
- 1991. 11 : 설계 공모작품 선정
- 1993. 9 : 정부대전청사 신축기공식
- 1997. 12 : 준공
- 2002. 10 : 어린이집 증축

### 나. 정부대전청사 개요

- 1997년 정부대전 청사의 준공은 대전이 국토의 중핵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희망을 던져줬다. 정치·행정·문화가 서울 중심으로 이뤄지던 행태에서 청사의 대전 이전은 대전에 행정중심도시로서의 긍지마저 느끼게 했다.

-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둔산동 920)
- 건립된 때 : 1997년 12월
- 규모 : 대지 518,338㎡, 건물 225,024㎡  
20층 높이의 건물 4개동(사무동)  
부속건물(후생동, 경비대, 어린이집)
- 후생 시설 : 은행, 우체국, 편의점, 서점, 약국, 식당 등
- 복지 시설 : 체력단련실, 축구장,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등

○ 지하 1층은 19층 규모의 4개동 청사 식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식당, 서점, 은행, 약국이 위치한다. 이곳은 선큰 가든의 설치로 지하공간에 까지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끌어 들인다.

- 지상 1층에는 민원실, 방호실 등이 있다. 개방된 3층으로 오르는 계단이 아트리움 측면으로 노출된 점은 관공서 건물인 청사에 현대적인 멋을 더하는 부분이다. 이곳에서는 또 음악회나 전시회가 열리는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도 담당한다.
- 2층은 기자실과 회의실, 3층은 전산실이 자리해 업무시설들이 상호 연관성을 지니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 각 건물의 4층부터 18층까지는 순수 업무 공간이며 19층에는 식당을 설치했다

입주기관 : 기 관 수 : 12개 기관

(관세청 등 9개 청, 정부기록보존소 등 3개소)

- 1동 - 관세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문화재청
- 2동 - 철도청, 정부기록보존소, 대전청사관리소
- 3동 -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 4동 - 특허청

- 지난 98년 8월 26일 이주를 완료한 정부 대전청사에는 정식 공무원만 4,246명, 비정규직 6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 철도청이 1실 10본부에 1,168명의 공무원들이 근무해 가장 많은 근무인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청이 5국 2실 7과에 1,041명으로 두번째로 근무인원이 많다.
  - 다음으로는 통계청이 4국에 427명, 조달청이 2실 3국에 416명, 관세청이 2실 4국에 264명, 중소기업청이 1실 3국에 206명, 병무청이 1실 2국에 197명, 문화재 관리청이 3국 11개과에 192명, 산림청이 1실 3국에 185명 순이다.

<표 II-4> 정부대전청사 근무인원

기 관 명	정 원(본청기준)
관 세 청	264
조 달 청	416
통 계 청	427
병 무 청	197
문 화 재 청	192
산 림 청	185
중 소 기 업 청	206
특 허 청	1,041
철 도 청	1,168
기 록 보 존 소	98
대 전 청 사 관 리 소	104
감 사 원	14
정 부 전 산 정보 관 리 소 대 전 운 영 실	2
계	4,246(서울78명 포함)

주 : 관리인력인력으로서 정부대전청사관리소와 103명(일반 50, 방문 53), 청사경비대 : 235명(경찰 29, 전경 206), 용역관리 : 293명(시설 122, 청소 156, 도우미 11, 조경 4)이 근무하고 있음.



- 또 청사관리사무소에 104명, 감사원 대전사무소에 14명, 정부기록보존소에 98명이 근무하고 있다. 여기에다 구내식당, 서점, 커피숍, 책방, 꽃집, 약국, 편의점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비정규직, 청사관리를 하는 경찰 등도 주요 구성원중 하나다.
-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산출해 보면 대전청사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편의시설 종사자 등을 합쳐 대략 4,6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한 중앙부처기관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면 <표 11-5>와 같다.

<표 11-5> 기관별 주요 업무

기 관 명	주 요 업 무
관세청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와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
조달청	정부물자의 구매·공급 및 정부의 주요시설 공사계약관리
통계청	국가통계활동의 기획 및 조정과 통계의 작성 분석 및 관리
병무청	병역의무자의 징병검사와 징집 및 향토예비군의 편성·지도
문화재청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과 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 연구
산림청	산림자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목의 이용개발 및 산림경영의 연구·개선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육성과 경영안전 지원 및 기술개발지원
특허청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철도청	국유철도의 건설과 안전관리, 철도운영 및 기술진흥
기록보존소	정부의 연구보존 문서·행정자료 등 기록물의 수집·관리 보존
대전청사관리소	정부대전청사 시설물의 유지·보수관리 및 방호·방화와 청사 안내

## ■ 청사특징

- 인간적인 근무환경
  - 청사로서의 기능성, 상징성, 개방성, 문화예술성 등을 적절히 조화시키면서도 행정의 효율성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간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주력
- 인텔리전트 빌딩 - 정보화시대의 최첨단 빌딩
  -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 정보통신(TC), 사무자동화(OA), 빌딩자동화(BA) 기능을 한 대의 IBS 호스트 컴퓨터가 통합관리
    - 빌딩자체의 부가가치를 극대화
    - 업무효율 및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
    - 인간과 사무기기, 정보의 조화로 각 부문 파급효과를 통한 행정 정보화의 신기원 개척
  - 정보통신시스템(TC)
    - 전자식 교환기, 음성자동안내시스템(ARS), 팩스사서함(FAX-MAIL), 자동무인증계기능을 수행하는 음성사서함시스템(VMS)
    - 고속의 디지털 전송망을 구축, 중앙 / 과천청사 및 청사내 타 기관과의 영상 회의가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
  - 사무자동화시스템(OA)
    - 근거리 통신망(LAN)으로 청사내 모든 전산망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
    - 통합정보망의 구축으로 개인별 PC를 통한 전자결재등 최첨단 행정서비스 구현
    - 중앙/과천청사간 고속데이터 전송 네트워크의 구성으로 원스톱(ONE-STOP) 민원서비스에 능동대처
  - 빌딩자동화 시스템(BA)
    - 중앙집중식 진공청소설비, 향온습설비 등 기계 및 설비의 최적운전을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공조제어시스템
    - 타임스케줄에 의한 중앙에서 제어 / 감시하는 조명제어시스템
    - 안정성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전력제어시스템
    - 출입통제시스템과 침입감시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통합방범시스템
    - 24시간 자동운영되는 재해방지시스템
    - 주차 및 차량출입의 안전관리를 위한 주차관리시스템

- 8만여평의 녹지공간과 여유있는 체육시설 확보
  - 축구장(1), 실내체육관, 농구장(1), 배구장(2), 수영장(체력단련실로  
임시활용 중), 테니스코트(10면), 체력단련실 등
- 전면 광장 및 건물 내부에 예술작품 설치로 문화적 분위기 연출(총 34점)
  - 사무동 내에 “작은 미술관” 설치(2002년)
- 쾌적한 첨단건물
  - 여유있는 사무공간 및 실내 조도, 온/습도 자동조절
    - 중앙청사 6.2평/인, 과천청사 7.5평/인, 대전청사12평/인
    - 보안, 전기, 가스, 수도시설의 이상유무 자동감지
  - 전화/PC 1인 1대 배정 및 서울, 과천, 대전간 전용회선
  - 민원인을 위해 지하 1층 각 입구 및 지상 1층 각 입구에  
빌딩안내설비(BIS) 설치
- 특수시설의 적정배치로 행정 생산성 향상에 기여
  - 민원실, 전시실, 회의실 등 공용시설 저층 집중 배치
  - 서고, 전산실 등 적재하중에 맞는 구조설계  
예) 일반사무실 350kg/m<sup>2</sup>, 서고 700kg/m<sup>2</sup>
  - 정부기록물보존을 위한 항온 / 항습시설 및 보존서고와 일반인을 위한  
열람실 등 완비
  - 조달업무를 위한 입찰실, 조달상담 민원실 등의 인근 배치
  - 공동이용시설 설치 : 대회의실(166석), 영상회의실(13석), 중회의실(2실,  
82석), 소회의실(3실, 90석)
    - 각 회의실 및 영상회의실은 회의상황 녹화 및 방송중계 가능
-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한 첨단시설 도입
  - 효율적 에너지관리를 수행하는 조명제어시스템
  - 심야전력을 이용한 냉방 방식인 빙축열시스템
  - 생활용수 재사용을 위한 중수처리시설 및 폐수의 자체 처리시설 완비
  - 대기환경보존을 위한 청정연료(LNG) 사용 및 청정 소화 약제 NAFS-III  
채택

### 3. 정부대전청사 이용자 분석

#### 가. 전체 이용자 분석

- 정부대전청사 이전에 따른 최근의 방문객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402천명, 2001년 439천명, 2002년 356천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방문기관별로 보면 정부물자 조달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청이 전체의 2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특허청이 15.6%, 그리고 철도청이 15.6%로 나타났다.
- 1일 방문객수의 경우, 2002년말 현재 평균방문객수는 조달청(297명), 특허청과 철도청(185명), 관세청(79명)순으로 나타났다.

<표 II-6> 일반 방문객 현황(2002년도)

월 별	근무일수	방문인원	1일 평균
계	300	356,056	1,187
1	26	32,608,	1,254
2	21	25,834	1,230
3	25	31,613	1,265
4	25	32,616	1,305
5	27	32,168	1,191
6	24	26,223	1,093
7	26	29,110	1,120
8	26	27,524	1,059
9	23	27,453	1,194
10	26	28,880	1,111
11	26	30,090	1,157
12	25	31,937	1,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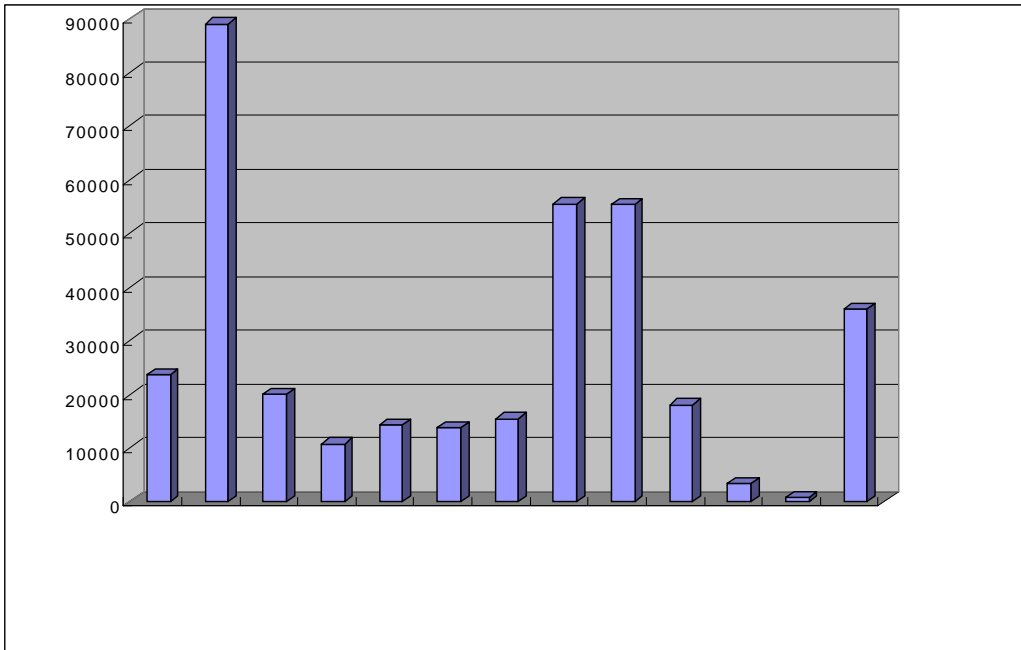
- 일반방문객의 경우 연간 근무일수 300일 기준으로 1일 평균 1,187명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대전청사가 도시의 관광자원으로서의 매력을 갖고 있어 시티투어 등 청사관람의 목적으로도 방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1-7> 각 기관별 방문인원

기 관 명	2000	2001	2002	
			연간 방문인원	1일 평균
계	369,721	412,588	356,056	1,187
관세청	14,271	20,457	23,700	79
조달청	95,835	99,701	89,021	297
통계청	19,679	18,347	19,977	67
병무청	11,841	25,312	10,781	36
문화재청	16,705	15,769	14,289	48
산림청	11,309	15,148	13,731	46
중소기업청	18,625	20,511	15,461	51
특허청	75,014	82,524	55,542	185
철도청	54,905	54,561	55,374	185
기록보존소	15,921	21,632	18,061	60
대전청사관리소	4,081	3,117	3,423	11
감사원 대전사무소	30,843	35,207	803	13
기타			35,893	119

주 : 2000년, 2001년 이용객 수는 총 이용자수에서 청사관람인원 2000년 32,352명, 2001년 16,426명을 뺀수임

- 2002년도 대전청사 방문객 현황을 살펴보면, 총 방문인 수는 382,450명으로 이중 단체방문객 26,394명, 일반방문객 356,056명으로 나타났으며, 1일 평균방문인 수는 1,275명(382,450명 / 300일)이다.



<그림 II-1> 각 기관별 방문인원

#### 나. 정부대전청사 단체 방문객 현황

- 정부대전청사의 방문객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단체방문객의 경우 2002년말 현재 총 26,394명이 방문했으며, 이 중 일반인이 10,854명(42%), 초등학교 8,773명(33%), 유치부 3,061명(12%), 중학교 2,190명(8%), 대학교 873명(3%), 고등학교 873명(2%) 순으로 나타났다.
- 2002년도 단체방문객 1일 평균인원이 약 88명이고, 6개 전시관 평균 이용인원이 약 169명임을 감안하면, 1일 약 80여명(연간 24,000명) 정도가 일반 관람객(업무관계로 청사를 방문한 후 관람)으로 추정된다.
- 정부대전청사는 대전시에서 운행하는 대전시티 투어 정규 코스에 포함되어 있으며, 개별 여행사를 통한 일반인들의 단체방문 및 유·청소년들의 학습탐방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다.

<표 II-8> 2002년도 단체방문객 현황

계	유치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	비고
26,394 (100%)	3,061 (12%)	8,773 (33%)	2,190 (8%)	643 (2%)	873 (3%)	10,854 (42%)	( )는 구성비

주 : 일반의 숫자에는 「대전 시티투어」 관람객 1,997명 포함

<표 II-9> 연도별 이용인원 추이

구분	계	유치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	비고
계	103,708	10,088	30,294	21,125	15,114	4,122	22,965	
1998	9,495	539	3,399	2,346	2,257	288	726	'98.10월 이후
1999	36,148	3,779	7,683	8,363	6,883	2,058	7,382	
2000	31,138	1,621	10,242	5,971	3,826	855	8,623	전년대비△13.8%
2001	26,927	4,149	9,030	4,445	2,148	921	6,234	전년대비△13.5%
2002	26,394	3,061	8,773	2,190	643	873	10,854	전년대비△2.0%

- 국가기록전시관, 문화상품전시관 등 정부대전청사에 상설되어 있는 각 전시관별 이용인원을 보면, 2002년말 현재 연간 총 303,800명이 이용했으며, 연 300일 기준으로 1일 평균 1,013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각 전시관 중 문화상품전시관이 1일 평균 470명, 발명인의 전당 204명, 조달홍보관 101명, 국가기록전시관 95명, 통계전시관 67명, 2001년 5월에 개관한 산림홍보교육관 76명 순으로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연간 55% 증가하였다.
- 청사관리사무소에 의하면, 2002년도 단체방문객 1일평균인원이 약88%, 6개 전시관의 평균 이용인원이 약 169명임을 감안하면 1일 약 80여명

(24,000명) 정도가 일반관람객(업무관계로 청사를 방문한 후 관람)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II-10> 각 전시관별 이용인원(2002년도)

구 분	연 간	월 간	일 일	비 고
계	약303,800명 (약50,630명)	약25,301명 (약4,217명)	약1,013명 (약169명)	년 300일 기준
국가기록전시관	약 28,600	약 2,380	약 95명	전년 대비 년간 55% 증가
조달홍보관	약 30,400	약 2,530	약 101명	
문화상품전시관	약 141,000	약 11,750	약 470명	
통계전시관	약 20,000	약 1,660	약 67명	
발명인의 전당	약 61,100	약 5,091	약 204명	
산림홍보교육관	약 22,700	약 1,890	약 76명	2001, 5. 11개관

주 : ( )는 6개 전시관 평균치임

자료 : 정부대전청사관리소, 대전청사 현황(내부자료)



### III. 정부대전청사 이전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1. 설문조사의 개요

- 정부대전청사의 대전이전 효과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설문 내용은 성별, 연령 등 일반사항과 출근형태 및 주거유형(통근수단, 통근소요시간, 주택유형 및 주거형태), 대전으로 이주한 이유(이주 직전 거주지, 대전이전 이유, 서울·수도권으로의 이주 의사, 이주한 가족 수 등), 정부청사의 대전 이전시 관련효과(대전 생활상의 장점, 불편한 점, 대전청사의 지역영향 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대전도시발전 방향(정부기관 지방이전 필요성, 이전 공무원의 우대 방법, 도시발전방향 등) 등을 중심으로 각 영역별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 설문조사의 대상은 대전청부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03년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였다. 표본의 크기는 총 600명으로 각 기관별 근무 인원수의 비율로 배분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조사원에 의한 1대 1 직접조사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 표본의 성별은 남자 474명(79.0%), 여자 126명(21.0%)이며, 연령별로는 30대가 280명(46.7%)로 가장 많았다. 가구원 수는 4명이 전체의 4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 중인 학생 수는 초등학교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에 응한 공무원은 일반 행정직이 43.0%, 기술직 37.2%이며, 근무처별로는 특허청, 철도청이 각 23.5%, 26.5%를 차지하고 있다(설문조사 내용 참조).

- 설문분석을 위한 통계분석기법으로는 SPSS / PC+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교차(crosstab table)분석을 하였다.

<표 III-1> 정부대전청사 설문조사 표본 수

기 관 명	정원(본청기준)	구성비	설문지 배분
관세청	264	6.1	37
조달청	416	9.6	58
통계청	427	9.9	60
병무청	197	4.6	28
문화재청	192	4.4	26
산림청	185	4.3	25
중소기업청	206	4.8	29
특허청	1,041	24.1	144
철도청	1,168	27.0	162
기록보존소	98	2.3	13
대전청사관리소	104	2.4	14
감사원	14	0.3	2
정부전산정보관리소대전운영실	12	0.3	2
계	4,324	100.0%	600

주 : 철도청의 경우 철도청본청 130명, 고속철도사업소 29명임.

<표 III-2> 설문조사 내용

구 분	설 문 내 용	문 항 번 호
일반사항	성별	21
	연령별	22
	가구원수	23
	교육 중인 학생수	24
	직렬(업무분야)	25
	근무처	26
출근형태 및 주거유형	통근수단	1
	통근 소요시간	2
	주택유형	3
	주거형태	4
대전이주 이유	대전청사 이전직전 거주지	5
	현재 거주지	6
	서울,수도권에서 통근이유	7
	대전이전 시기	8
	대전이전 이유	9
	서울, 수도권으로 이주의사	10
	서울, 수도권으로 재이사시 주 된 이유	10-1
	대전이주시 동반이주자	11
	가족 모두 이주한 이유	11-1
	가족 일부 이주한 이유	11-2
이주한 가족수	11-3	
대전이전시 관련효과	대전생활상의 장점	12
	생활의 불편한 점	12-1
	업무시 불편한 점	13
	대전청사의 지역영향 효과	14
	대전청사의 기대효과 달성	15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6
	- 대전시대 지출	16-1
	- 대전시외 지출	16-2
대전도시발전방향	정부기관 지방이전 필요성	17
	정부기관이전과 지방발전	18
	이전공무원의 우대방법	19
	도시발전 방향	20

## 2. 설문조사 분석

### 가. 일반사항

#### 1) 성 별

-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474명(79.0%)이 남자로 나타났으며, 여자 응답자가 126명(21.0%)으로 나타나 여성 응답자 보다는 남성 응답자가 약 4배 정도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 응답자 성별

구 분	빈 도	비 율(%)
① 남 자	474	79.0
② 여 자	126	21.0
계	600	100.0

<표 III-4> 성별과 연령

구 분	20세 ~ 29세	30세 ~ 39세	40세 ~ 49세	50세 ~ 59세	계
남 자	29 (6.1)	227 (47.9)	176 (37.1)	42 (8.9)	474 (79.0)
여 자	48 (38.1)	53 (42.1)	22 (17.5)	3 (2.4)	126 (21.0)
계	77 (12.8)	280 (46.7)	198 (33.0)	45 (7.5)	600 (100.0)

#### 2) 연 령

- 응답자의 연령분포는 30~39세가 전체 응답자의 46.7%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높은 분포대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40~49세가 33.0%, 20~29세가 12.8%, 50~59세가 7.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5> 응답자 연령

구 분	빈 도	비 율(%)
① 20세 ~ 29세	77	12.8
② 30세 ~ 39세	280	46.7
③ 40세 ~ 49세	198	33.0
④ 50세 ~ 59세	45	7.5
계	600	100.0

### 3) 가구원 수

- 응답자의 가구원 수를 살펴보면 4명으로 이루어진 가구가 46.7%, 3명 21.2%, 5명 12.5%, 2명 7.8%, 1명 8.0%로 나타났으며, 6명 이상도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I-6> 응답자 가구원수

구 분	빈 도	비 율(%)
① 1명	48	8.0
② 2명	47	7.8
③ 3명	127	21.2
④ 4명	280	46.7
⑤ 5명	75	12.5
⑥ 6명	20	3.3
⑦ 7명 이상	3	0.5
계	600	100.0

<표 III-7> 성별과 가구원수

구 분	남 자	여 자	계
1명	34( 7.2)	14(11.0)	48( 8.0)
2명	32( 6.8)	15(11.9)	47( 7.8)
3명	94(19.8)	33(26.2)	127(21.2)
4명	240(50.6)	40(31.7)	280(46.7)
5명	57(12.0)	18(14.3)	75(12.5)
6명	17( 3.6)	3( 2.4)	20( 3.3)
7명	-	3( 2.4)	3( 0.5)
계	474(79.0)	126(21.0)	600(100.0)

#### 4) 교육 중 학생 수

- 응답자 600명 중 현재 교육 중에 있는 자녀 수(유치원 포함)는 총 542명으로 한 가구당 약 1명꼴로 나타났으며, 교육 대상이 아닌 자녀를 가진 응답자는 211명이며, 교육 중에 있는 응답자는 389명으로 1가구당 1.4명으로 나타났다.
- 그 중 초등학생이 18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치원생 155명, 중학생 93명, 고등학생 55명, 대학 이상도 58명을 보이고 있다.

<표 III-8> 교육 중인 학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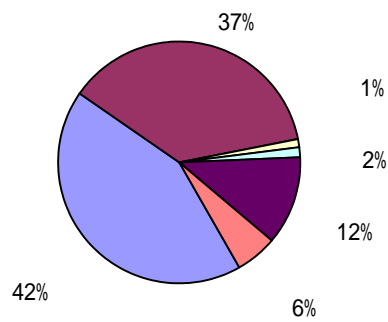
구 분	학 생 수
① 없다	211
② 유치원	155
③ 초등학교	181
④ 중학교	93
⑤ 고등학교	55
⑥ 대학 이상	58
계	542

#### 5) 직렬(업무분야)

- 응답자의 직렬분야는 일반 행정직이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술직 37.2%, 기능직 11.5%를 보이고 있다. 기술직의 경우 통계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9> 직렬(업무분야)

구 분	빈 도	비 율(%)
① 일반직	258	43.0
② 기술직	223	37.2
③ 전문직	7	1.2
④ 별정직	9	1.5
⑤ 기능직	69	11.5
⑥ 기타	34	5.7
계	600	100.0



<그림 III-1> 업무분야

<표 III-10> 근무처와 직렬

구 분	일반직	기술직	전문직	별정직	기능직	기타	계
① 관세청	28 (75.7)	1 (2.7)	-	1 (2.7)	7 (18.9)	-	37 (6.1)
② 조달청	27 (46.6)	25 (43.1)	1 (1.7)	1 (1.7)	3 (5.2)	1 (1.7)	58 (9.6)
③ 통계청	38 (63.3)	-	-	1 (1.7)	14 (23.3)	7 (11.7)	60 (9.9)
④ 병무청	14 (50.0)	1 (3.6)	-	3 (10.7)	8 (13.3)	2 (7.1)	28 (4.6)
⑤ 문화재청	6 (23.1)	16 (61.5)	-	-	3 (11.5)	1 (3.8)	26 (4.4)
⑥ 산림청	10 (40.0)	6 (24.0)	1 (4.0)	1 (4.0)	6 (24.0)	1 (4.0)	25 (4.3)
⑦ 중소기업청	14 (48.3)	5 (17.2)	-	-	6 (20.7)	4 (13.8)	29 (4.8)
⑧ 특허청	22 (15.3)	101 (70.1)	2 (1.4)	-	11 (7.6)	8 (5.6)	144 (24.1)
⑨ 철도청	86 (53.1)	62 (38.3)	3 (1.9)	1 (0.6)	3 (1.9)	7 (4.3)	162 (27.0)
⑩ 기록보존소	10 (76.9)	-	-	-	-	3 (23.1)	13 (2.3)
⑪ 대전청사관리소	2 (14.3)	4 (28.6)	-	1 (7.1)	7 (50.0)	-	14 (2.4)
⑫ 감사원 대전사무소	1 (50.0)	-	-	-	1 (50.0)	-	2 (0.3)
⑬ 정부전산정보관리소 대전운영실	-	2 (100.0)	-	-	-	-	2 (0.3)
계	258 (43.0)	223 (37.2)	7 (1.2)	9 (1.5)	69 (11.5)	34 (5.7)	600 (100.0)

## 6) 근무처

- 응답자는 현재 대전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인원인 4,324명(서울 근무 78명 포함) 중 600명으로, 근무처는 근무인원이 가장 많은 철도청 27.0%, 특허청 24.1%, 통계청 9.9%, 조달청 9.6%, 관세청 6.1%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1> 근무처

구 분	빈 도	비 율(%)
① 관세청	37	6.1
② 조달청	58	9.6
③ 통계청	60	9.9
④ 병무청	28	4.6
⑤ 문화재청	26	4.4
⑥ 산림청	25	4.3
⑦ 중소기업청	29	4.8
⑧ 특허청	144	24.1
⑨ 철도청	162	27.0
⑩ 기록보존소	13	2.3
⑪ 대전청사관리소	14	2.4
⑫ 감사원 대전사무소	2	0.3
⑬ 정부전산정보관리소 대전운영실	2	0.3
계	6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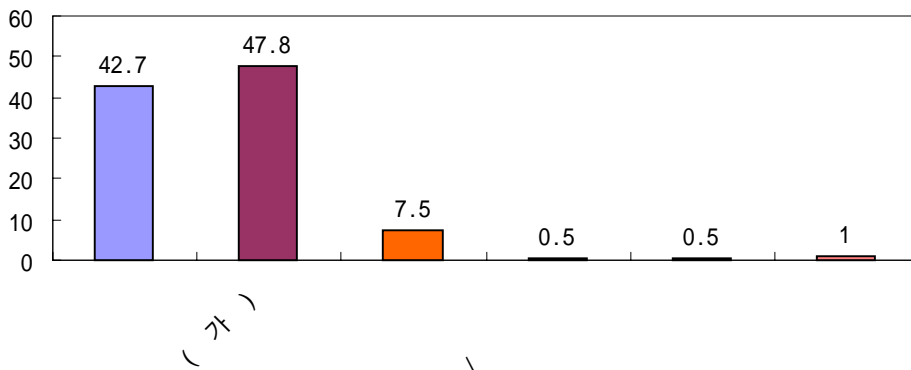
## 나. 출근형태 및 주거유형에 관한 사항

### 1) 주요 통근 수단

- 응답자의 42.7%가 도보로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승용차를 이용한 통근형태는 47.8%를 차지하고 있다. 통근에 따른 소요시간은 10분 이하가 23.8%, 10-20분 45.7%, 20-30분 17.0%이며, 20분 이하가 전체의 69.5%를 차지하고 있다.
- 1시간 이상은 1.7%에 불과해 서울에 비하여 출퇴근 시간이 크게 절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2> 출근시 주요 통근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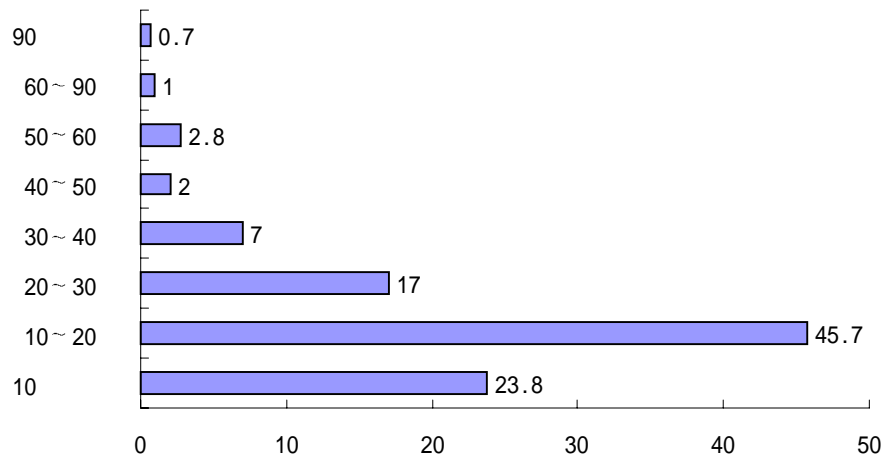
구 분	빈 도	비 율(%)
① 도보	256	42.7
② 승용차(자가용)	287	47.8
③ 대중교통	45	7.5
④ 통근·통학버스	3	0.5
⑤ 기차	3	0.5
⑥ 기타	6	1.0
계	600	100.0



<그림 III-2> 통근수단

<표 III-13> 통근 소요시간

구 분	빈 도	비 율(%)
① 10분 이하	143	23.8
② 10~20분	274	45.7
③ 20~30분	102	17.0
④ 30~40분	42	7.0
⑤ 40~50분	12	2.0
⑥ 50~60분	17	2.8
⑦ 60~90분	6	1.0
⑧ 90분 이상	4	0.7
계	600	100.0



<그림 III-3> 통근 소요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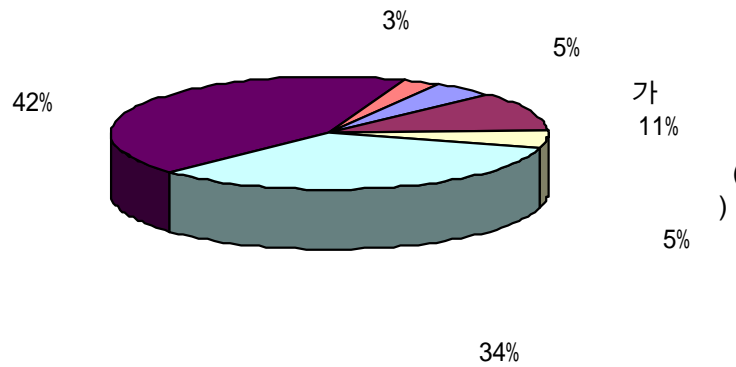
## 2) 거주하는 주택유형

- 응답자들의 거주하는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전체의 7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공무원 아파트에 33.8%, 일반 아파트에 42.5%가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 11.3%, 단독주택에 4.5%가 거주하고 있다.
-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주거형태는 자가가 48.3%, 전세 39.0%, 월세 5.3%를 보이고 있다. 자가점유비율은 2000년 현재 서울의 41% 수준보다도 높게 나타났다.<sup>3)</sup>

3) 대한주택공사, 주거복지백서 - 주택정책의 계층성 평가를 중심으로 -, 대한주택공사, 2002. 9, p. 108.

<표 III-14> 거주 주택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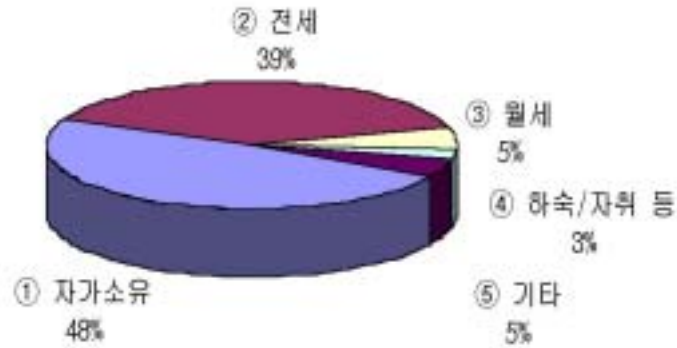
구 분	빈 도	비 율(%)
① 단독주택	27	4.5
② 다가구 주택	68	11.3
③ 연립주택(빌라 포함)	30	5.0
④ 공무원 아파트	203	33.8
⑤ 공무원용외의 일반아파트	255	42.5
⑥ 기타	17	2.8
계	600	100.0



<그림 III-4> 주택유형

<표 III-15> 주택의 주거형태

구 분	빈 도	비 율(%)
① 자가소유	290	48.3
② 전세	234	39.0
③ 월세	32	5.3
④ 하숙·자취 등	16	2.7
⑤ 기타	28	4.7
계	600	100.0



<그림 III-5> 주거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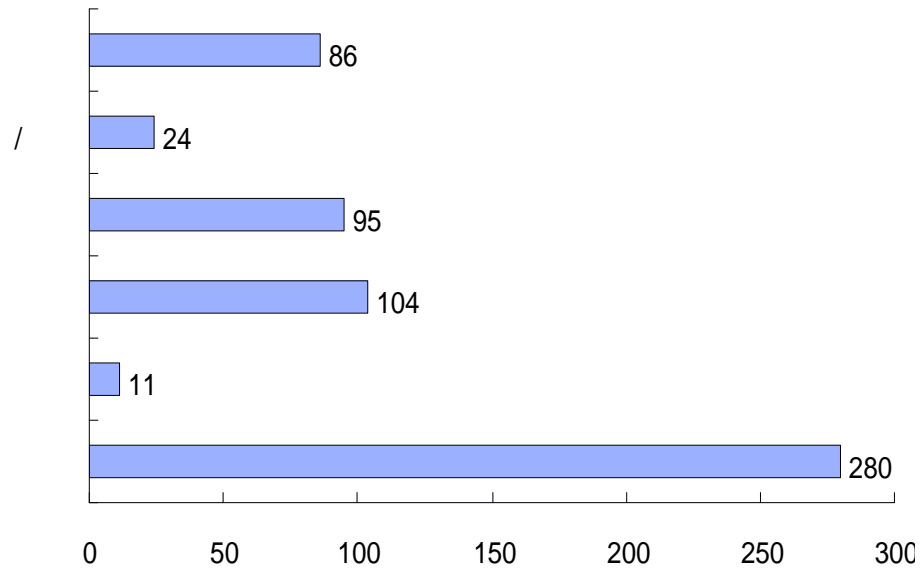
#### 다. 대전이전 이유 및 가족관계

##### 1) 거주하는 주택유형

- 정부대전청사가 대전으로 이전(1998년)하기 직전 응답자의 거주지는 서울이 46.7%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1.8%, 17.3% 등 수도권 지역에 65.8%가 거주한 반면에 대전 거주는 15.8%, 인근인 충남·북지역 거주는 4.0%, 기타 영·호남지역 거주가 14.3%를 보이고 있다.

<표 III-16> 정부대전청사 이전하기 직전 거주지

구분	빈도	비율(%)
① 서울	280	46.7
② 인천	11	1.8
③ 경기	104	17.3
④ 대전	95	15.8
⑤ 충남·북	24	4.0
⑥ 기타	86	14.3
계	600	100.0



<그림 III-6> 이전 거주지역

## 2) 현재 거주지와 통근여부

- 응답자의 현재 거주지는 97.7%가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인근 충남·북 지역 1.3%, 수도권 지역 0.7%를 보이고 있다.
- 총 응답자 600명 중 0.7%인 4명만이 통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근을 하는 이유로는 가족이나 배우자의 직장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정부대전청사관리소에서 의하면 2000년 8월 현재 통근(기차, 버스)율이 2.6%로 조사되었으나, 지금은 99% 정도가 대전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7> 현재 거주지

구 분	빈 도	비 율 (%)
① 서울	3	0.5
② 인천	1	0.2
③ 경기	-	-
④ 대전	586	97.7
⑤ 충남·북	8	1.3
⑥ 기타	2	0.3
계	600	100.0

<표 III-18>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의 통근 이유

구 분	빈 도	비 율(%)
① 가족이나 배우자의 직장관계로	3	75.0
② 자녀의 교육문제 때문에		
③ 서울 및 수도권으로 업무를 보러 가는 경우가 더 많아서		
④ 대전에 따로 주택을 구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1	25.0
⑤ 대전의 문화·복지시설이 좋지 않아서		
⑥ 부모님 등을 모시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⑦ 통근에 불편을 느끼지 않아서		
⑧ 기타		
계	4	100.0

### 3) 대전이전시기

- 응답자의 82.3%는 정부대전청사가 대전으로 이전한 이후에 대전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대전청사가 이전하기 전부터 대전에 거주한 응답자의 비율도 17.7%를 보이고 있다.

<표 III-19> 대전이전 시기

구 분	빈 도	비 율(%)
① 그렇다	482	82.3
② 정부대전청사 이전 전부터 대전에서 거주했다	104	17.7
계	586	100.0

#### 4) 대전으로 이전한 가장 큰 이유

- 대전으로 이전한 가장 큰 이유는 직장이동에 따른 직장과의 근접성 때문이라는 응답이 95.4%를 차지하고 있어 직장이 주거이동(residential mobility)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0> 대전 이전 이유

구 분	빈 도	비 율(%)
① 직장이동에 따른 직장과의 거리	460	95.4
② 대전의 교통이 편리해서	6	1.2
③ 교육환경의 양호	3	0.6
④ 낮은 주택가격	6	1.2
⑤ 문화생활 및 쇼핑 여건 양호	1	0.2
⑥ 환경/경관의 양호	6	1.2
⑦ 기타	-	-
계	48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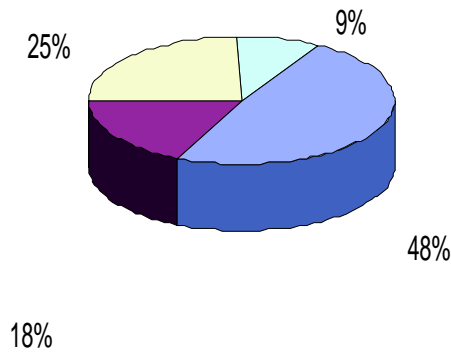
#### 5) 서울, 수도권으로의 재이주 의사

- 다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이주할 의사는 없다가 48.5%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되면 수도권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17.8%, 직장이 변동된다면 수도권으로 이사할 것 같다가 24.7%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의 재이주 의사는 42.5%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III-21>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재이주 의사

구 분	빈 도	비 율(%)
① 없다	234	48.5
② 여건이 허락하면 수도권으로 이사하고 싶다	86	17.8
③ 직장변동시 수도권으로 이사할 것 같다	119	24.7
④ 아직 잘 모르겠다	43	8.9
계	48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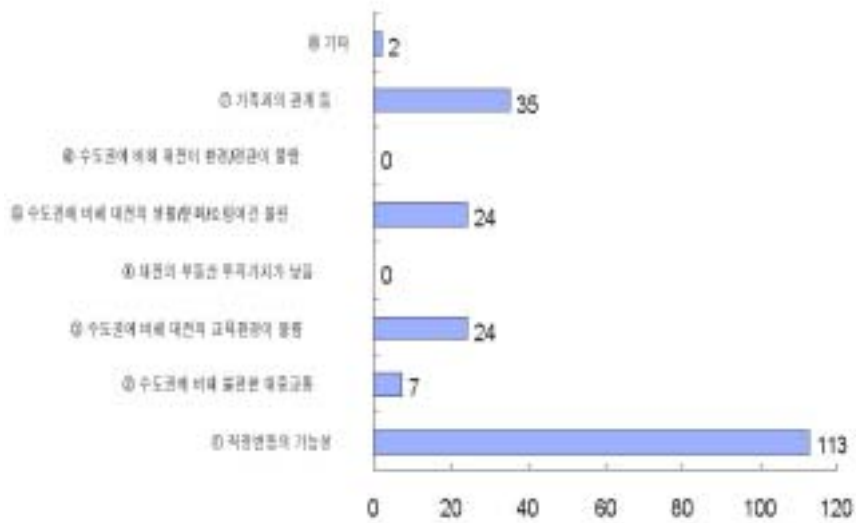
<그림 III-7> 수도권으로의 재이주 의사

#### 6)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이사하고 싶은 이유

-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이사하고 싶은 이유는 직장변동의 가능성이 55.1%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으며, 가족관계 17.1%, 수도권에 비하여 대전의 교육환경이 낮다와 수도권에 비해 대전의 생활·문화·쇼핑여건 불편이 각각 11.7%를 보이고 있다.

<표 III-22>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재이사 이유

구분	빈도	비율(%)
① 직장변동의 가능성	113	55.1
② 수도권에 비해 불편한 대중교통	7	3.4
③ 수도권에 비해 대전의 교육환경이 불량	24	11.7
④ 대전의 부동산 투자가치가 낮음	-	
⑤ 수도권에 비해 대전의 생활·문화·쇼핑여건 불편	24	11.7
⑥ 수도권에 비해 대전이 환경·경관이 불량	-	
⑦ 가족과의 관계 등	35	17.1
⑧ 기타	2	1.2
계	20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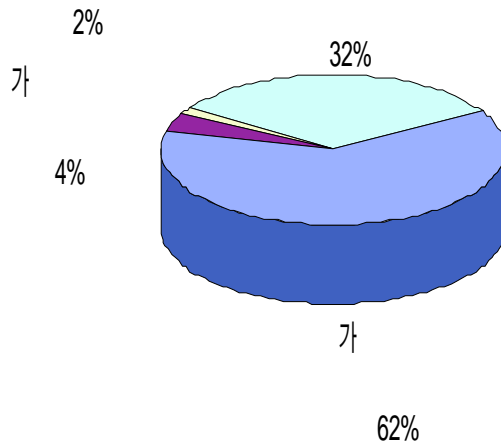
<그림 III-8> 수도권으로 이사하고 싶은 이유

### 7) 대전이주시 동반 이주자

○ 다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이주할 의사가 없거나 아직 잘모르겠다라고 응답한 277명의 응답자 중 직장이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함께 이주한 동반자를 보면, 가족 모두가 이주했다가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혼자만 이주할 경우도 32.1%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I-23> 대전 이주시 동반 이주자

구 분	빈 도	비 율(%)
① 가족 모두 이주	172	62.1
② 가족 중 일부만 이주	11	4.0
③ 배우자랑 단 둘이서만 이주	5	1.8
④ 혼자서만 이주	89	32.1
계	27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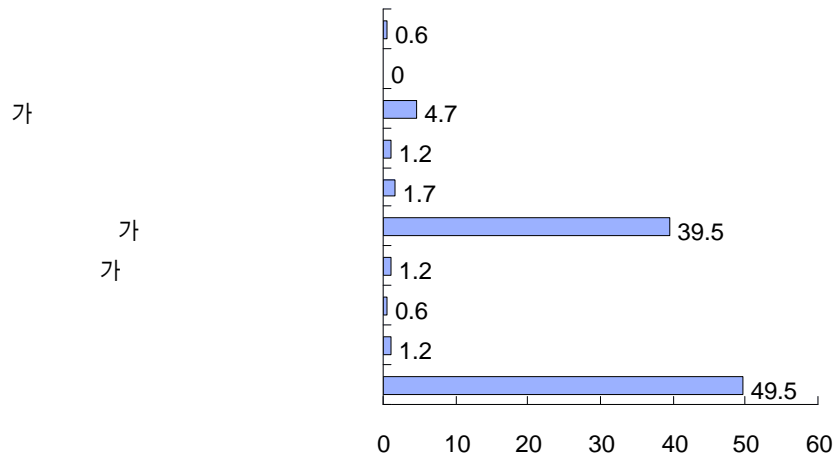
<그림 III-9> 이주 가족 구성

#### 8) 가족 모두 이주한 이유

- 현재 대전으로 가족 모두가 이주한 가장 큰 이유는 직장이동에 따른 직주근접을 위한 직장과의 거리단축이 49.5%,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서가 39.5%의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그 외에도 가족과의 공유시간의 확대를 위해서가 4.7%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I-24> 가족 모두 이주한 이유

구분	빈도	비율(%)
① 직장과의 거리를 단축하기 위해	85	49.5
② 대전이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	2	1.2
③ 대전이 교육환경 양호하기 때문	1	0.6
④ 대전이 주택가격이 저렴하기 때문	2	1.2
⑤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68	39.5
⑥ 다른 지역에서 통근하기 싫어서	3	1.7
⑦ 대전이 환경·경관이 양호하기 때문	2	1.2
⑧ 가족과의 공유시간 확대를 위해	8	4.7
⑨ 문화생활과 쇼핑여건이 좋아서	-	-
⑩ 기타	1	0.6
계	17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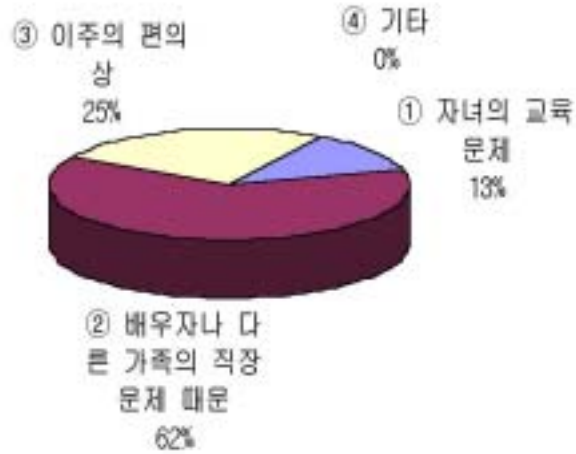
<그림 III-10> 가족 모두 이주한 이유

9) 가족 모두 이주한 이유

- 대전으로 가족 일부만 이주한 이유로는 배우자나 다른 가족의 직장문제 때문이 6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주의 편의상 25.0%, 자녀의 교육문제가 12.5%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25> 가족 일부만 이주한 이유

구분	빈도	비율(%)
① 자녀의 교육문제	2	12.5
② 배우자나 다른 가족의 직장문제 때문	10	62.5
③ 이주의 편의상	4	25.0
④ 기타	-	-
계	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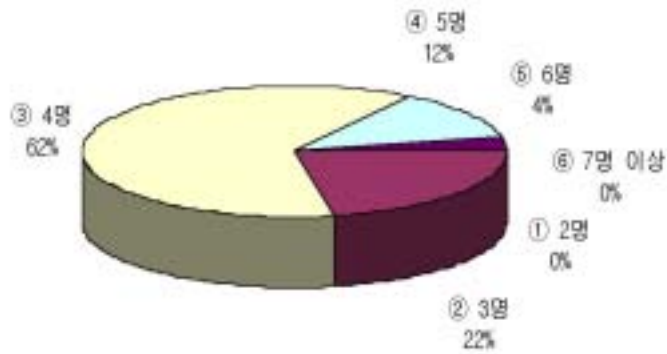
<그림 III-11> 가족의 일부만 이주한 이유

#### 10) 이주한 가족 수

○ 가족이 대전으로 이주한 경우 가족 구성원은 4인 가구가 55.9%로 가장 높았으며, 3인 가구 19.7%, 5인 가구 11.2%, 2인 가구 10.1% 순을 보이고 있다.

<표 III-26> 가족 일부 이주한 경우 이주한 가족수

구 분	빈 도	비 율(%)
① 2명	19	10.1
② 3명	37	19.7
③ 4명	105	55.9
④ 5명	21	11.2
⑤ 6명	6	3.2
⑥ 7명 이상	-	-
계	188	100.0



<그림 III-12> 가족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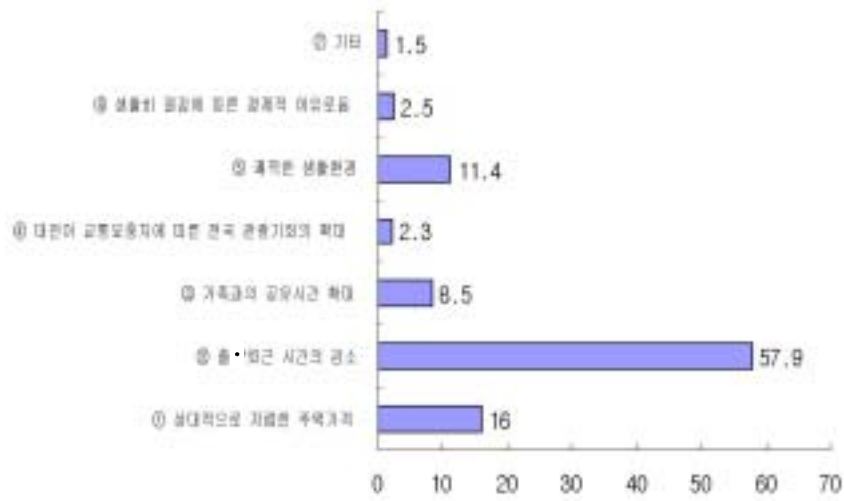
## 라. 대전 이전시 관련 효과

### 1) 대전 생활의 장점

-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하여 대전 생활의 장점으로서는 출·퇴근 시간의 감소가 57.9%로 가장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가격 16.0%, 쾌적한 생활환경 11.4%, 가족과의 공유시간 확대 8.5% 순을 보이고 있다.

<표 III-27> 대전 생활상 장점

구분	빈도	비율(%)
①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가격	77	16.0
② 출·퇴근 시간의 감소	279	57.9
③ 가족과의 공유시간 확대	41	8.5
④ 대전이 교통요충지에 따른 전국 관광기회의 확대	11	2.3
⑤ 쾌적한 생활환경	55	11.4
⑥ 생활비 절감에 따른 경제적 여유로움	12	2.5
⑦ 기타	7	1.5
계	482	100.0



<그림 III-13> 대전 생활의 장점

우리도 이제 충청인-“삶의 질 최고“

대전청사 공무원들의 삶은 풍성해졌고 대전의 지역경제도 덩달아 살찌고 있다. 5년 전만 해도 공무원의 절반가량만 대전으로 이주했지만 이제는 공무원 4000여명(일용직 제외) 가운데 88%(약 3500명) 가량이 터전을 대전으로 옮겼다. 매년 기러기 아빠·엄마나 통근족들은 줄어드는 추세고 일단 대전으로 옮겨오면 어김없이 '충청인'으로 변신한다.

☞대전은 3고(高)의 도시

대전은 '놀고먹고 자는 데' 최고의 조건을 갖췄다는 뜻에서 3고의 도시로 불린다. 대전청사 한 과장은 “경부와 호남, 대전고속도로가 연결된 대전은 전국을 무박(無泊)으로 관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왕복 5시간이면 사천에 가서 회를 먹고 돌아오는가 하면, 3시간만에 전주에서 비빔밥도 즐길 수 있다는 얘기도.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많아지면서 어느새 집안에서 '좋은 아빠'라는 소리도 듣는다. 산림청 이종건 사무관은 “서울에서는 출퇴근하느라 몇 시간씩을 보내야 했지만 대전에서는 걸어서 10분만에 출퇴근하고 있다.”며 “자연스레 가족들과 보내거나 여행하는 시간이 늘면서 아이들에게서 '우리아빠 최고'라는 말을 듣게 됐다.”고 흐뭇함을 감추지 않았다.

대전청사 공무원들은 다양한 취미생활을 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고 있다. 관세청 P국장은 대전에서 1시간 거리의 금산에 개인 농장을 꾸민 뒤 주말이면 농장 가꾸는 쓸쓸한 재미에 시간가는 줄 모른다. 친척이나 친구들이 대전에 오면 농장으로 데려가곤 하는 그는 퇴직한 뒤에 가족들이 함께 하는 농장으로 활용한다는 생각이다.

관세청에는 함께 주말농장을 꾸리는 모임인 '흙사모'도 생겨났다. 회원들은 금산에 400여평의 땅을 사들여 주말과 휴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농장을 가꾸고 있다. 박상덕(조사감시과) 흙사모 회장은 "회원들이 각자 10평씩을 나눠 고구마와 고추, 상추 등을 심고 직접 수확도 하고 있다."면서 "직원간 화합은 물론 가족들, 특히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자연학습을 시킬 수 있어 더할 수 없이 좋다."고 말했다.

철도청 홍보실의 정병우씨는 마라톤 마니아. 대전에 내려오면서 시작한 마라톤이 이제는 1주일에 몇차례 뛰지 않으면 몸이 근질거릴 정도가 됐다.

그는 "퇴근 후 청사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고 일주일에 2~3차례 갑천변을 달리는 일은 서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자랑했다.

김해수 철도청 안전환경실장은 "망설임 끝에 대전으로 이사를 왔지만 지금은 대전 생활에 100% 만족한다."면서 "삶의 질은 서울보다 두배 이상 풍성해졌다."고 웃었다.

(대한매일, 2003년 06월 27일, 7면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 2) 대전 생활의 불편한 점

- 정부대전청사의 대전이전에 따른 생활상의 불편한 점으로는 불편사항이 없다는 의견이 29.5%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불편한 점으로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부족 24.9%, 교육기회 부족 18.9%, 여가오락 공간의 부족 9.5%, 교통의 불편함 7.9%, 가족과의 주말 생활 4.4% 순으로 나타났다.
- 서울에 비해 문화예술 향유기회의 부족은 내년 4월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서울로의 공연 관람회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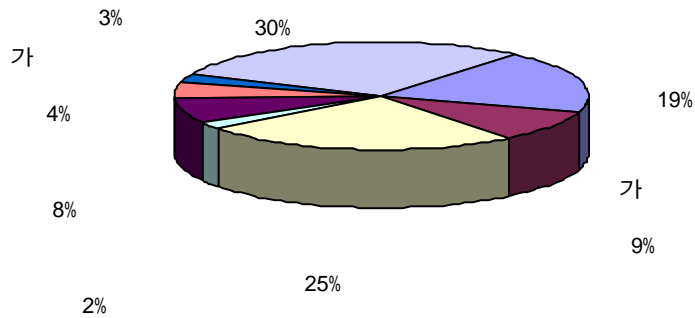
4) 예를 들어, 고속철도의 건설은 지역간 시간거리를 단축시켜 지역간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지방의 문화기능이 꼭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 도카이도(東海道) 신간선이 개통된 후 사회·문화적 중추관리 기능의 지역간 격차가 완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동경으로 집중된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였다.



- 주5일 근무제의 본격적인 실시에 앞서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생활공간의 정비 및 확충이 요구된다.

<표 III-28> 대전 생활의 불편한 점

구 분	빈 도	비 율(%)
① 교육기회 부족	91	18.9
② 여가 오락공간의 부족	46	9.5
③ 문화예술 향유 기회부족	120	24.9
④ 쇼핑의 불편함	11	2.3
⑤ 교통의 불편함	38	7.9
⑥ 가족과의 주말생활	21	4.4
⑦ 기타	13	2.7
⑧ 불편사항 없음	142	29.5
계	482	100.0



<그림 III-14> 이전에 따른 생활의 불편한 점

### 3) 업무시 불편한 점

- 정부대전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전이전에 따라 업무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으로는 서울로의 출장시간 과다가 30.7%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특히 서울로의 빈번한 출장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 이 밖에 가족과의 별거 15.8%, 지방근무에 따른 소외감 14.7%, 서울과 대전 양 지역의 주거 및 생활비 부담 6.8%순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불편사항이 없다는 의견도 27.2%로 높게 나타났다.

#### [대전청사 5년] ③ 힘겨운 업무처리

“승용차 내구연한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정부대전청사 기관장들의 하소연이다. 서울과 대전을 일주일에 3~4일 왕복하다 보니 한 해 동안 주행거리는 5만~7만km. 행정자치부가 정한 승용차 내구연한 5년이 되지 않아 승용차를 바꿔야 할 판이다.

산림청장 승용차는 지난 99년에 구입했지만 주행거리는 4년여 만에 무려 28만km를 돌파했다. 출장 공무원만큼 승용차도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다.

#### ☞ “간부들은 서울출장 중“

간부들의 서울출장이 잦은 까닭은 업무협의를 있지만 권력의 서울집중 탓도 크다. 대전청사 관계자는 “발명관련 행사는 연구소들이 집중돼 있는 대전에서 치르는 게 마땅하지만 장관 등의 수요자가 서울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열리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예산편성철과 국회가 열릴 때면 대전청사의 실·국장 이상 간부들은 아예 서울에서 살다시피 한다. 한 과장은 “국회가 열릴 때면 아예 전화로 결재를 받곤 한다.“면서 “다른 정책업무는 사실상 스톱상태“라고 말했다. 차관급 외청 가운데 유일하게 차관 회의(목요일)에 참석하는 중소기업청의 경우에는 다른 청보다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한 국장은 지난해 12월 국장을 맡은 뒤 지금까지 두 달 이상을 아예 서울에서 내려오지 못했다.

정부대전청사의 한 간부는 “법령제정권 등 권한이 상급기관에 있고 국회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요과정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1년의 절반을 머무를 수밖에 없다.”면서 “왕복 5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출장이 반복되다 보면 내부 업무 차질은 물론 몸에도 이상이 오는 것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대전청사 9개 외청의 기획부서 공무원들은 지난 2001년에 절반가량을 서울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청의 경우 출장비용으로 지난 97년 한 해 동안 2억원대를 지출했지만 이전한 뒤에는 3배인 6억원대를 쓰고 있다.

#### ☞ “1시간 뒤에 서울회의에 참석하라고요?”

대전청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전직 고위간부는 “대전에 내려온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회의 1시간 전에 참석 통보를 받은 황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나 위로는 못해줄망정 오히려 사기를 떨어트리는 언행을 보면 화를 참기 어려웠다.”고 ‘높은 분’들을 겨냥했다. 기관장 차량을 운전하는 한 공무원은 “서울에서 열리는 회의 등의 시간을 맞추기 위해 진땀을 흘리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다.”고 털어놨다.

한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 등의 시스템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지만 공직사회 회의 대면(對面)문화만큼은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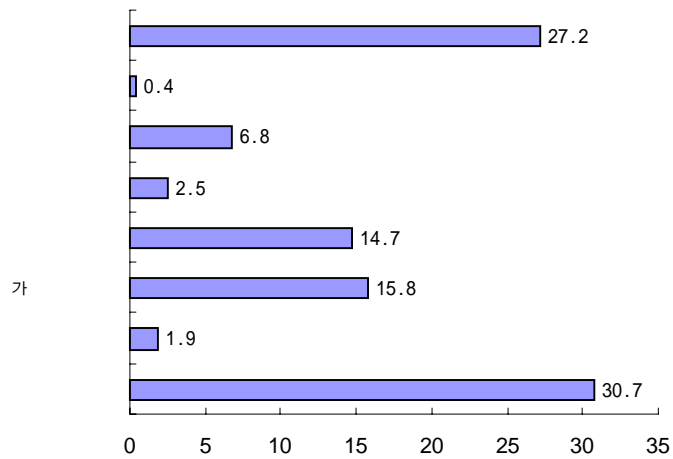
협의가 요구되는 업무는 차치하더라도 대전청사 공무원들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도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에 내려오면서부터는 업무 브리핑과 행사 일정마저도 서울에 맞추는 등 상부의 눈치보기가 오히려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대전청사에 대한 배려도 기대이하라는 게 정부대전청사 공무원들의 불만이다. 모든 권한 위임이 안 된 채 조직만 지방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시간·경제적 손실 등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 5년 동안 손꼽을 정도만 내부승진으로 청장에 올랐고 국·과장에까지 상급부서의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는 외청 푸대접은 오늘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01년 기획예산처 담당관들이 대전청사를 방문, 이례적으로 현장에서 기관 의견을 청취한 것이 주목받았던 상황은 대전청사 위상의 미약함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얘기도.

(대한매일, 2003. 7. 10. 7면, 박승기기자)

<표 III-29> 청사의 대전이전에 따른 업무상 불편한 점

구 분	빈 도	비 율(%)
① 서울로의 출장시간 과다	148	30.7
② 통근시간의 과다	9	1.9
③ 가족과의 별거	76	15.8
④ 지방근무에 따른 소외감	71	14.7
⑤ 결제 지연 등 업무처리시간의 과다	12	2.5
⑥ 서울과 대전 양 지역의 주거 및 생활비 부담	33	6.8
⑦ 기타	2	0.4
⑧ 불편사항 없음	131	27.2
계	482	100.0



<그림 III-15> 이전에 따른 업무상 불편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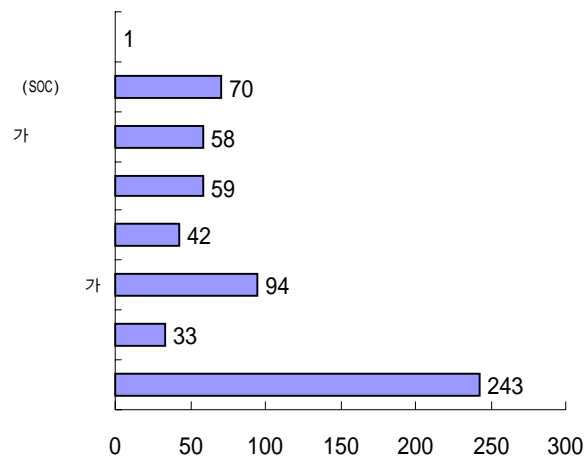
#### 4) 대전청사의 지역에 미치는 효과

- 정부대전청사가 대전에 미치는 효과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40.5%가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 산업 성장에 따른 지역 상권 확대를 들고 있으며, 이는 대전청사주변이 밤낮없이 생기 넘치는 도심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내방객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 이외에도 대전시의 인구 증가 15.5%, 대전시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11.7%, 대전시의 고용기회확대 9.8%, 대전시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 9.7%, 대전시의 재정수입 확대 7.0%, 대전시의 교육수준 상승 5.5%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0> 정부대전청사의 지역영향 효과

구 분	빈 도	비 율(%)
①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산업성장에 따른 지역 상권확대	243	40.5
② 대전시 교육수준의 상승	33	5.5
③ 대전시 인구의 증가	94	15.7
④ 대전시 재정수입의 확대	42	7.0
⑤ 대전시의 고용기회 확대	59	9.8
⑥ 대전시 부동산 가격의 상승	58	9.7
⑦ 대전시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70	11.7
⑧ 기타	1	0.2
계	6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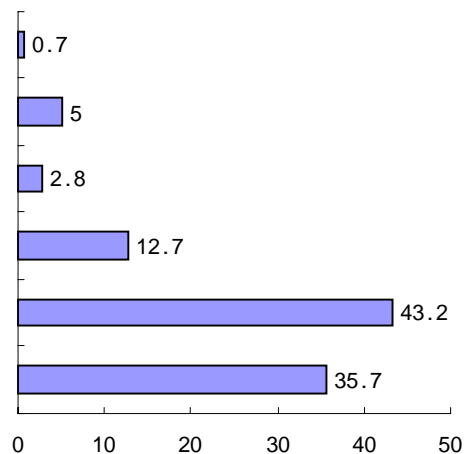
<그림 III-16> 청사 이전의 주요 효과

### 5) 대전청사의 기대효과 달성

- 정부대전청사의 건립목적은 수도권인구분산, 전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청 단위 기관의 집중배치로 업무 능률 향상 및 국민 편의 제공에 있다.
- 정부대전청사의 대전 이전으로 소기의 목표를 가장 크게 달성한 것으로 국토균형발전이 43.2%로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 인구분산 35.7%, 청 단위 기관의 집중배치에 따른 업무능률 향상 12.7% 순으로 나타났으나, 크게 달성한 목표가 없다는 의견도 5.0%를 보이고 있다.

<표 III-31> 정부대전청사의 기대효과 달성

구분	빈도	비율(%)
① 수도권 인구분산	214	35.7
② 국토균형발전	259	43.2
③ 청 단위기관의 집중배치에 따른 업무능률 향상	76	12.7
④ 대 국민편의제공	17	2.8
⑤ 없다	30	5.0
⑥ 기타	4	0.7
계	600	100.0



<그림 III-17> 청사 이전 성과

6) 대전청사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정부대전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 지출사항을 대전 시내에서의 지출과 대전시외에서의 지출 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월 급여의 81.7%가 대전시내에서 음·식료품비, 교육비, 문화·여가비, 주거비, 저축 등에 사용되고 있다.
- 지출현황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금융기관에서의 저축이 18.5%, 음·식료품비 16.7%, 주거·광열·의료비 13.2%, 교육비 11.9%, 문화·여가비 9.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전시외지역에서는 월 급여의 18.3%가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5)</sup>

<표 III-32>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구 분		비 율 (%)
16-1) 대전 시내에서의 지출	대전시내에서 지출되는 음·식료품비 비율은(외식비 포함)?	월급여의 대략 (16.7%)
	대전시내에서 지출되는 교육비 비율은?	월급여의 대략 (11.9%)
	대전시내에서 지출되는 문화·여가비 비율은?	월급여의 대략 ( 9.0%)
	대전시내에서 지출되는 주거·광열·의료비 비율은?	월급여의 대략 (13.2%)
	대전시내에 금융기관에서의 “저축”비율은?	월급여의 대략 (18.5%)
	대전시내에서 지출되는 기타 지출비율은?	월급여의 대략 (12.4%)
	계	81.7%
16-2) 대전시외에서의 지출	대전시외(충·남북, 수도권 등 모두 포함)에서 지출되는 모든 지출 비율은?	월급여의 대략 (18.3%)
합	계	총 100.0%

5) 정부대전청사의 대전이전에 따른 공무원의 급여가 대전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월급여의 지출사항을 대전시내 및 대전시외 지역별, 그리고 지출내역별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총 100%를 기준으로 작성함.

## 마. 향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도시발전의 방향

### 1) 정부기관의 지방이전 필요성

- 정부대전청사의 대전이전을 계기로 정부 및 산하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40.8%가 필요한 편이다. 33.7%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해 전체의 74.5%가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반면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9.5%에 불과하였다.

#### ☞ 유관기관 이전 미흡 아쉬워

지난 98년 정부 대전청사의 입주를 앞두고 제시됐던 청사진중 가장 미흡한 분야가 바로 유관기관 이전이다.

대전으로 이주해온 외청들 대부분이 집행부서이다 보니 산하기관을 거느리고 있는 곳이 별로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서울을 버리고 이주를 선택할 만큼의 의식변화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

당초 대거 대전전입이 점쳐지던 조달청의 1만7천여 협력업체들 중 대전으로 전입해 온 곳은 1%도 되지 않고 있으며 지사를 설립한 곳도 3%대에 그치고 있다.

또 등록된 전체 2천여명의 변리사 가운데 대전에 개업했거나 지사를 설치한 곳은 3%대인 60여명에 그치고 있으며 문화재관련업무 회사, 중소기업업무 처리회사 등의 대전이전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들의 이주로 둔산지역 아파트 가격은 서울 강북지역과 비슷할 정도로 치솟고 있지만 사무실 공실률은 심각한 수준이다.

3년 전에 준공한 오피스텔들이 아직도 입주율이 7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식당이나 주점업소를 제외한 업무용 시설은 곳곳에 미분양된 채 방치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바로 문화재청의 유관기관들이 속속 이주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문화재 연구소가 이전해와 1백여명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여에 전 통문화학교가 2000년에 개교돼 학생 5백60명, 교수 등 교직원 6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또 천연기념물보호센터와 매장문화재센터가 늦어도 2005년 이주를 목적으로 청사를 신축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유관기관의 이주율이 낮은 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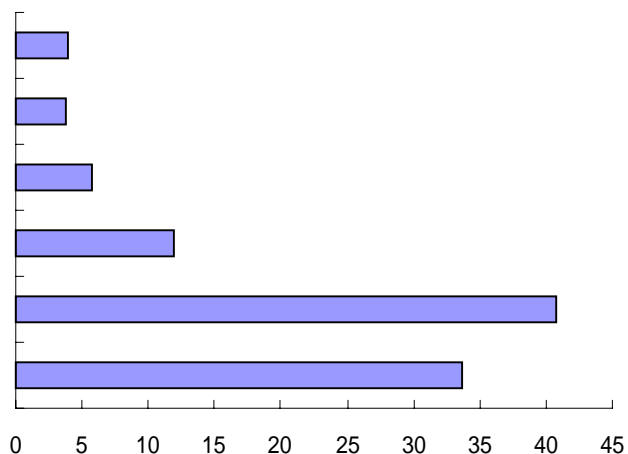
전자정부가 구현되면서 제도가 간소화되고 정보 공개가 활발해 짐에 따라 기관방문 및 공무원 접촉 빈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구태여 대전에 상주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청사만 대전에 위치하고 있을 뿐 업무의 대부분을 서울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련공무원들의 설명이다.

(대전일보, 2003. 8. 22자, 송광석기자)

<표 III-33> 정부 및 산하기관의 지방이전 필요성

구 분	빈 도	비 율(%)
① 매우 필요하다	202	33.7
② 필요한 편이다	245	40.8
③ 보통이다	72	12.0
④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34	5.7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23	3.8
⑥ 잘 모르겠다	24	4.0
계	6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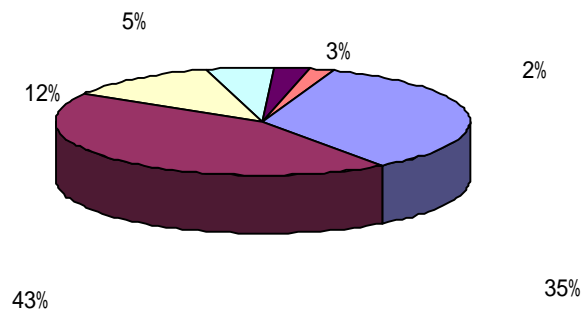
<그림 III-18> 청사이전의 필요성

## 2) 정부기관의 지방이전과 지방발전

- 정부 및 산하기관의 지방이전이 수도권외의 과밀화 해소와 지방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도움이 된다 34.8%, 도움이 되는 편이다 43.8%로 긍정적인 응답이 전체의 77.8%를 차지하고 있다.
- 반면에 도움이 되지 않은 편이다 5.2%,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0%로 부정적인 응답은 8.2%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약 80%는 정부기관의 지방이전이 지방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표 III-34> 정부 및 산하기관의 지방이전과 지방 발전

구분	빈도	비율(%)
① 매우 도움이 된다	209	34.8
② 도움이 되는 편이다	258	43.0
③ 보통이다	73	12.2
④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31	5.2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8	3.0
⑥ 잘 모르겠다	11	1.8
계	6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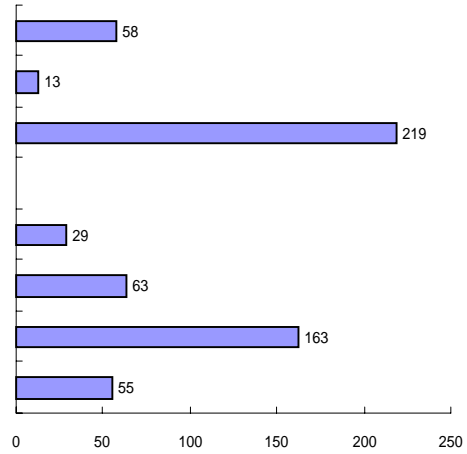
<그림 III-19> 청사 이전 효과

### 3) 이전 공무원의 우대방법

-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한 공무원들에 대한 우대방안에 대해서는 대전시 생활여건의 지속적 편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36.5%가 응답하고 있으며, 현직 근무시 급여상의 인센티브 부여 27.2%, 현직 근무시 인사상의 인센티브 부여 10.5%, 현직 근무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담 완화 9.2% 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
- 이 결과로 볼 때, 대전시는 대전으로 이전한 공무원들의 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시설의 정비와 지방세 부담의 완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정부 및 산하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될 때,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급여상, 인사상의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III-35> 이전 공무원의 우대방법

구	분	빈도	비율(%)
①	현직 근무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담 완화	55	9.2
②	현직 근무시 급여상의 인센티브 부여	163	27.2
③	현직 근무시 인사상의 인센티브 부여	63	10.5
④	퇴직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등 지역발전에 기여유도	29	4.8
⑤	대전시 생활여건의 지속적 편리화 도모	219	36.5
⑥	공무원 임대주택 건설 및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13	2.2
⑦	기타	58	9.7
계		6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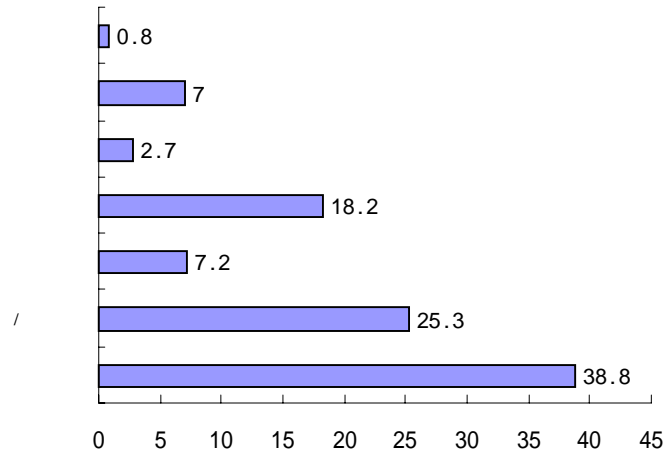
<그림 III-20> 이전 공무원 우대책

#### 4) 도시발전 방향

- 향후 대전시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도시발전의 방향에 대한 응답은 쾌적한 환경친화적 주거도시의 형성이 38.8%로 가장 높았으며, 우수한 교육여건이 구비된 교육·연구도시 25.3%, 종합 행정중심도시 18.2%, 첨단산업이 중심이 된 첨단산업도시, 문화예술도시 7.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6> 대전시의 도시발전의 방향

구분	빈도	비율(%)
① 쾌적한 환경친화적 주거도시	233	38.8
② 우수한 교육여건이 구비된 교육·연구도시	152	25.3
③ 첨단산업이 중심이 된 첨단산업도시	43	7.2
④ 종합 행정중심도시	109	18.2
⑤ 문화예술의 도시	16	2.7
⑥ 국토의 중심성을 살린 교통요충도시	42	7.0
⑦ 기타	5	0.8
계	100.0	100.0



<그림 III-21> 대전발전의 방향

## IV. 정부대전청사의 이전효과

- 정부대전청사의 대전이전 효과 분석을 출근형태 및 주거유형에 관한 사항, 정부대전청사의 대전이전 및 관련 효과 등에 관한 사항,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 향후 대전시 도시발전방향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관련 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이에 따라 정부대전청사의 이전효과를 출·퇴근 및 주거생활, 정주생활의 변화, 생활의 장·단점 등 공무원 개인생활에 미친 효과와 대전 지역에 미친 효과를 인구증가와 사회간접자본 확충, 소비·지출형태,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파급효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대전시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sup>6)</sup>

### 1. 공무원 개인생활에 미친 효과

#### 가. 출·퇴근 및 주거생활

- 정부대전청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주요 통근 수단은 42.7%가 도보로 출근을 하고 있으며, 직장과 거주지와 통근시간은 10분 이하가 23.8%, 10-20분이 45.7%로 20분 이하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 거주 주택유형은 공무원 아파트에 33.8%를 비롯하여 일반 아파트 등 아파트에 76.3%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의 주거형태는 자가 4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정부대전청사관리소에서는 청사 이전에 따른 효과를 ①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관련기관 이전으로 대덕밸리 등과 연계된 시너지 효과발생, ②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③ 고용 및 인구증가에 따른 소득 및 생산향상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 거양, ④ 사회·문화 등 전 분야 성숙된 기반여건 조성으로 중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⑤ 중앙기관 입지에 따라 외국문물의 집축기회 증대, ⑥ 중앙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예산 배정 시 대전지역에 대한 배려 확대, ⑦ 중부 이남 지역(특히 대전지역)의 행정서비스 제공의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 등으로 분석하였다(정부대전청사관리소 내부자료)

- 정부대전청사에서 200여m 떨어진 샘머리아파트<sup>7)</sup>는 대전청사 공무원을 위해 조성되었으며, 2000년 당시 청사 공무원의 약 38%가 거주했으며, 도보로 불과 10여분 걸리는 위치에 있다. 출퇴근 시간의 감소는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한 이유가 되며 가족과의 사랑을 확인하고 대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이 서울 생활과의 가장 크게 다른 점이고 할 수 있다.

<표 IV-1> 대전시 공동주택 현황(2003. 1. 31일 현재)

구 분	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단지수	460	70	104	128	48	110
동 수	2,751	337	518	990	415	491
세대수	215,579	24,088	34,976	89,784	32,041	34,690

<표 IV-2> 샘머리아파트 현황

공동주택명	위 치	규 모	사용승인일
샘머리(1단지)	둔산동 907	15층 16동 1,350세대	'98. 8.22
샘머리(2단지)	둔산동 908	20층 22동 2,200세대	'98. 9.30

#### 나. 정주생활의 변화

- 정부대전청사에 근무하기 직전의 응답자들의 거주지는 서울 46.7%를 비롯하여 수도권지역 65.8%가 거주하였으며, 대전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18.3%가 거주하였다. 그러나 현재에는 97.7%가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지역으로부터의 통근자는 600명 중 4명에 불과하였으며, 통근의 이유로는 가족이나 배우자의 직장관계인 것으로 보이고 있다.

7) 2003년 1월말 현재 대전시 공동주택은 460개 단지에 215,579세대가 있으며, 정부대전청사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샘머리아파트는 1, 2단지로 1998년 8월과 9월에 입주를 시작하였으며, 총 3,550세대이다.

- 정부대전청사 이전 이후 대전청사 공무원들의 대전 정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약 98%가 대전으로 이주해 왔고 이 중 80% 이상이 결혼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1가구를 4인 가족으로 기준한다면 정부 대전 대전청사로 유입된 공무원 가족수는 약 14,100명( $4,246 \times 0.98 = 4,146$ ,  $(832 + 3,317 \times 4) \approx 14,100$ 명)이 된다.
- 그리고 대전 대전거주자의 대부분은 정부대전청사가 대전으로의 이전한 이후에 이주하였으며, 대전으로 이전한 가장 큰 이유는 직장이동에 따른 직장과의 거리를 들고 있다. 그러나 여건이 허락된다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외의 재이주에 대한 의사를 42.5%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이주할 의사가 없다는 48.5%보다는 낮은 응답을 보였다.
-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다시 이사할 의사가 있는 주된 이유로는 직장변동의 가능성과 가족과의 관계, 대전교육환경의 불량, 대전의 생활·문화·쇼핑여건의 불편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대전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청사주변의 둔산지역과 노은지구, 연구단지주변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8)</sup>
- 특히, 공무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둔산지역은 대전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은 교육열과 밀집된 학원 등의 각종 교육시설이 입지해 있으며, 쇼핑공간은 갤러리아 타임월드 백화점, 롯데백화점, 까르푸 둔산점을 시작으로 반경 2km내에 이마트, 월마트, 홈플러스를 비롯하여 유성 까르푸 등의 대형 할인매장 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점을 고려할 때 응답자들이 지적한 대전교육환경의 불량, 대전의 생활·문화·쇼핑여건이 서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편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 한편 대전이주시 가족 모두 이주한 응답자는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자서만 이주한 경우가 3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모두 이주한 가장 큰 이유로는 직장과의 거리 단축을 위해서와 가족과의 동

8) 대전일보, 2003. 8. 22일자 참조.



거를 위해서가 90%를 차지하고 있다. 가족 일부만 이주한 이유로는 배우자나 다른 가족의 직장문제 때문이라는 응답율이 높았다. 그리고 이주한 가족 수 기준으로 4명 가구가 전체의 55.9%를 차지하고 있다.

#### 다. 생활의 장·단점

- 대전청사로 이주한 공무원들은 대전생활의 장점으로선 앞서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출·퇴근시간의 감소를 들고 있는 반면에 불편한 점으로는 문화예술 향유기회의 부족에 대해 가장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 현재 대전시에서는 시민문화향유기회의 제공과 확대를 위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예술작품 공연·전시로 시민 문화향유권 확대,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창조하고 누리는 쌍방적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sup>9)</sup>. 금년에 개관한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의 건립을 계기로 이러한 대전의 문화예술공연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 <대전문화예술의전당 현황>

##### ☞ 목 표

- 중부권 최대·최고의 종합 문화예술공간 확보
- 수준높은 다양한 공연활동 수시 전개 →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 사업개요

- 위 치 : 서구 만년동 396번지(둔산대공원내 시립미술관 옆)
- 규 모 : 부지 30,270평, 연건평 12,334평(지하 2층, 지상 3층)
- 주요시설 : 대공연장 1,510석, 소공연장 : 615석, 시립예술단 연습실 등
- 사업기간 : 1996. 3 ~ 2003. 8(7년 6월)
- 사 업 비 : 966억원(국비 175, 시비 791)

- 9) ○ 추진기간 : 2003. 1 ~ 12  
 ○ 소요예산 : 1,686백만원  
 ○ 내 용  
 -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 280백만원(2003. 2월중 심의예정)  
 - 문예진흥기금 지원 ⇒ 500백만원(2003. 2월중 심의 예정)  
 - 시립예술단 공연 ⇒ 140여회  
 - 대전예술 제작배포 ⇒ 12회 / 3,600부  
 - 시립예술단,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강좌 ⇒ 3회

- 한편 대전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업무시 불편한 점으로는 서울로의 출장시간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가족과의 별거생활을 들고 있다.
- 대전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잦은 수도권 출장을 들고 있다. 정부대전청사 간부급 공무원들이 서울 출장이 잦은 이유는 ‘업무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권력이 지나치게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 또한 ‘법령제정권 등 권한이 상급기관에 있고, 국회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요과정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의 절반을 서울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의견과 ‘왕복 5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출장의 반복으로 내부 업무의 차질과 건강에도 적신호가 오는 경우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 잦은 출장에 따라 9개 대전청사 기획부서 공무원들은 2002년에 절반가량을 서울에서 근무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철도청의 경우 출장비용으로 지난 97년에는 2억원정도 지출했지만 대전으로 옮겨와서는 3배가 넘는 6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상태이다.<sup>10)</sup>

## 2. 지역에 미친 효과

### 가. 인구 증가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 그리고 대전청사의 입지로 인해 대전지역에 미치는 효과로는 대전시의 인구증가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되었다는 점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인구증가의 경우 대전은 청사가 이전한 1998년 1,345,684명에서 2002년말 1,424,844명으로 8만여명 증가했다.

10) 대전일보, 2003. 8. 25일자.

- 1998년을 기준으로 대전은 다른 대도시와 비교하여 5.9%의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였으며, 울산 5.1%, 광주 4.4%, 인천 3.9%, 대구 1.4%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에 서울과 부산은 0.4%, 2.5%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 특히, 정부대전청사가 입지한 대전광역시 서구의 인구증가 요인중 사회적요인의 증가수준이 대전광역시 전체의 사회적 인구증가(시도간 인구가동 기준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도 24.8%, 1991년도 26.0%, 1992년도 30.8%, 1993년도 35.9%로 지속적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둔산 신도시개발이 완료된 시점임 1994년에는 무려 132.8배가 증가하였고, 이후 증가 폭이 다소 완화되었다가 정부대전청사 이전에 따른 공무원아파트가 공급되면서 다시 1997년 162.4%, 1998년 115.7%로 급격한 증가추이를 보였으나, 2000년에는 4.4%로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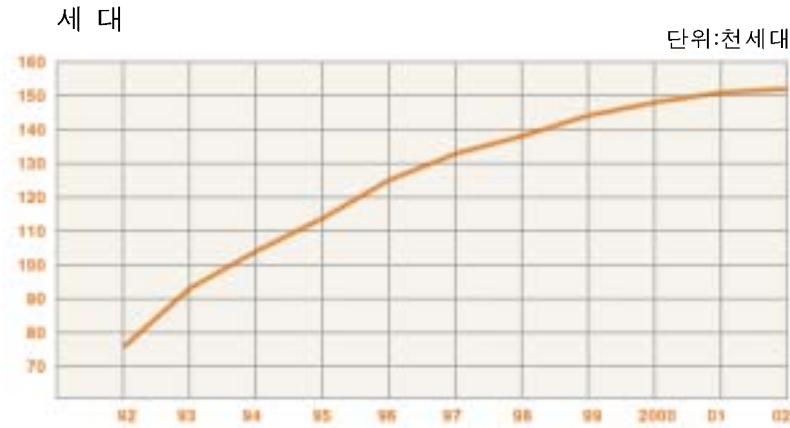
<표 IV-3> 시도별 주민등록인구

(단위 : 명, %)

구 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993	45,077,487	10,925,464	3,868,429	2,315,353	2,144,350	1,249,681	1,191,187	
1994	45,512,117	10,798,700	3,846,544	2,346,956	2,208,269	1,273,854	1,235,378	
1995	45,981,910	10,595,943	3,892,972	2,485,977	2,362,132	1,287,134	1,268,432	
1996	46,433,920	10,469,852	3,878,918	2,490,960	2,404,353	1,302,261	1,297,884	
1997	46,885,255	10,389,057	3,865,114	2,501,928	2,460,906	1,326,478	1,323,009	1,013,070
1998	47,173,959	10,321,496	3,842,834	2,504,645	2,498,404	1,342,009	1,345,684	1,018,068
1999	47,542,573	10,321,449	3,831,454	2,517,203	2,524,251	1,359,646	1,368,287	1,027,280
2000	47,976,730	10,373,234	3,812,392	2,538,212	2,562,321	1,375,212	1,390,510	1,044,161
2001	48,289,173	10,331,244	3,786,033	2,539,587	2,581,557	1,387,360	1,408,809	1,060,378
2002	48,517,871	10,280,523	3,747,369	2,540,647	2,596,102	1,401,525	1,424,844	1,070,277
98-02 증가율	2.8	△ 0.4	△ 2.5	1.4	3.9	4.4	5.9	5.1

자료 : <http://www.nso.go.kr/>

주 : 연말기준, 주민등록에 의한 집계



<그림 IV-1> 서구의 세대수 증가

- 또한 청사이전과 관련해 둔산신시가지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만년동, 월평동, 둔산동 등지에 대규모 주택지와 상업지가 조성되었고, 간선도로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었다.
- 대전청사의 이전의 건립목적인 수도권의 인구분산, 국토의 균형발전의 도모 여부에 대해서는 43.2%가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으며, 수도권의 인구분산이라는 측면에도 35.7%가 응답하고 있다.
- 그러나 국가의 중추기능의 지방분산을 통한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자 추진한 정부대전청사의 이전은 기대했던 만큼의 실효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왜냐하면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정부대전청사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의 지방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 그 자체만으로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시키는 데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sup>11)</sup>

11) 김홍태, 둔산신도시 평가 및 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2002. p. 104.

## 나. 소비·지출형태

- 대전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월 급여 중 81.7%는 대전시내에 지출하고 있으며, 그 중 금융기관에서의 저축, 음·식료품비, 주거·광열·의료비 13.2%, 교육비 11.9%, 문화·여가비 9.0% 순으로 지출하며, 대전시외지역에서는 월급여의 18.3%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3년 현재 대전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는 4,246명이며, 2003년도 총 인건비는 195,943백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1인당 월 평균 3,846,000원으로 이 중 81.7%가 대전시내에 지출되는 경비는 3,142,000원이다.
- 대전시의외 지역으로 지출되는 인건비 18.3%로 704,000원이다. 인건비가 대전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IV절의 투입산출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요즘 대전시 서구 만년동은 중부권에서 가장 호황을 누리는 음식점 밀집지역이다. 3-4층짜리 연면적 5백평 이상의 대형건물을 통째로 쓰고 있는 음식점들이 즐비하다. 사상 최악의 불황이라지만 만년동 일대 음식점만은 예외다. 점심때는 물론 저녁도 인산인해를 이룬다.

만년동과 월평동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은 1천39개소. 정부 대전청사에 인접한 선사유적지 일대와 KBS 대전방송총국 인근에만 음식점 6백여곳이 몰려 있다. 대부분 2000년 이후에 생긴 이들 음식점은 한정식, 일식, 갈비, 민물장어 등 고급음식점 일색이다.

한 대형 음식점 주인은 “청사 공무원들이 회식자리도 많고 청사 내방인들이 하루 평균 2천명 정도 되기 때문에 대형 고급음식점이 유리할 것 이라고 판단했다”며 “정부 청사와 관련된 매출이 전체의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대전일보, 2003. 8. 23일자, 한경수기자)

#### 다.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파급 효과

- 대전으로 이전한 현 대전정부청사에 근무하는 종사자수는 모두 4,324 명이며, 이들 종사자의 2003년도 전체 인건비(소득) 규모는 1,969억 7,3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앞서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소득액 가운데 지역내에서 소비되는 비율이 약 81.7%로 나타났다.
- 결국 2003년도 한 해 동안 대전정부청사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대전 지역에서 지출한 소비지출 규모는 1,609억2,700만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따라서 대전정부청사의 대전이전으로 대전지역에는 공공부문 종사자수가 신규로 4,246명 증가하고, 청사이전에 따른 신규 지역내 소득증가의 발생과 이에 따른 최종수요에 해당하는 신규 소비지출 규모가 증가하는 등 정부대전청사의 이전은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특히 산업에 있어서 각 산업부문별로 생산, 고용, 소득 및 부가가치 창출에 큰 과장을 미치게 됨으로써 당초 예상한 것처럼 대전지역 경제에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였다고 보며, 이제 어느 정도 이전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단계에 있는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표 IV-4>정부대전청사 종사자수 및 인건비(2003년 기준)

(단위 : 백만원)

기 관 명	종사자수 (대전청사기준)	2003년도인건비	
		전체	대전청사
관세청	264	164,600	13,525
조달청	416	35,732	18,876
통계청	427	116,610	16,696
병무청	197	61,051	9,393
문화재청	192	22,967	12,050
산림청	185	64,420	9,431
중소기업청	206	24,661	10,992
특허청	1,041	47,895	47,895
철도청	1,168	1,246,516	49,011
기록보존소	98	5,112	5,112
대전청사관리소	194	-	2,962
감사원	14	-	646
정부전산정보관리소대전운영실	12	-	384
계	4,246	1,789,564	196,973

주 : 중소기업청, 특허청 각각 서울 39명 포함, 철도청은 본청 955명, 고속철도건설사업소 213명

- 정부청사의 대전이전의 결과 지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는 청사이전에 따른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고용, 생산, 소득 및 부가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직접효과 이외에도 이와 같은 공공부문에서의 고용, 생산 등 신규 경제제량의 변동에 따라 파생되는 여타 산업분야로의 고용유발, 생산유발, 소득유발 및 부가가치 유발이라고 하는 간접효과를 가져오며, 결국 청사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는 이와 같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총 효과에 해당한다.

- 2003년 11월말 현재 기준 종사자수 및 인건비(소득)를 기준으로 한 직접고용효과는 4,246명이며, 지역내 타산업부문에 미친 간접고용효과 6,984명을 합한 총 고용효과는 11,230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청사이전에 따른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직접생산효과는 1,876억4,300만원이며, 간접생산효과는 공공부문 고용증가에 따른 생산증가가 타산업분야에 간접으로 미친 생산유발효과 1,008억5,900만원과 공공부문 소득증가에 따라 발생한 지역내 소비증가(최종수요)가 가져온 생산유발효과 2,659억4,800만원으로 이들 직접 및 간접생산효과를 합한 총 생산유발효과는 5,544억5,000만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대전정부청사 종사자들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청사이전에 따른 지역내 신규 소득증대는 2003년도 인건비 1,969억7,300만원(직접소득)과 전산업부문의 소득에 미친 간접소득 1,386억1,300만원을 합한 3,355억8,600만원으로 분석되었다.
-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신규 고용증가와 이에 따른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산출증가 결과 나타난 지역내 신규 부가가치 발생 총액은 공공부문으로부터 발생한 직접부가가치 975억3,700만원과 지역내 타산업부문에 미친 산출증가 결과 나타난 간접부가가치 유발액 1,906억6,600만원을 합한 지역내 총부가가치 유발액 2,882억300만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5> 정부대전청사 이전에 따른 대전지역으로의 경제적 파급효과

구 분		경제적 효과
직접효과	직접고용효과(1)	4,246명
	직접생산효과(2)	187,643백만원
	직접소득효과(3)	196,973백만원
	직접부가가치효과(4)	97,537백만원
간접효과	간접고용유발효과(5)	6,984명
	간접생산유발효과 <sup>1)</sup> (6)	100,859백만원
	간접생산유발효과 <sup>2)</sup> (7)	265,948백만원
	간접소득유발효과(8)	138,613백만원
	간접부가가치유발효과(9)	190,666백만원
총 효과	총고용유발효과(1+5)	11,230명
	총생산유발효과(2+6+7)	554,450백만원
	총소득유발효과(3+8)	335,586백만원
	총부가가치유발효과(4+9)	288,203백만원

주 1) 공공부문 고용증가(4,246명)에 따른 생산증가가 타산업분야에 미친 생산유발효과  
 2) 공공부문 소득증가에 따라 발생한 역내 소비증가(최종수요)가 가져온 생산유발효과  
 3)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대전시 도시발전방향

- 정부대전청사 이전을 계기로 정부 및 산하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40.8%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수도권외의 과밀해소와 지방의 발전이 도모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77.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방으로 이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전 지역에 대한 생활여건의 지속적 편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참여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과 동시에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전대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도권에 소재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기능별로 유사한 기관은 함께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그리고 이전대상기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상호협상 및 이전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에는 구체적인 이전대상

기관, 이전지역, 이전절차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2003년말까지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 대전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향후 대전시가 쾌적한 환경친화적 도시, 우수한 교육여건이 구비된 교육·연구도시, 종합 행정중심도시로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다.
- 국가의 중추기능의 지방 분산을 통한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고자 목적을 갖고 추진한 둔산 신도시개발 및 정부대전청사 이전은 기대했던 만큼의 실효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 왜냐하면 앞서서도 나타났듯이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정부대전청사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지역발전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공공기관의 나홀로 이전만이 이루어졌을 뿐 유관기관의 이전은 그리 많지 않았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 그 자체로서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시키는 데는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V. 결 어

- 금년 8월 26일은 정부대전청사가 1998년 대전으로 이주해 온지 5년이 되었으며, 정부대전청사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으로 균등한 지역발전 도모하기 위하여 1998년 입주를 하였으며, 현재 정부 대전청사에는 12개 기관에 4,2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 본 연구는 대전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수도권 인구분산 및 국토의 균형 발전, 국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정부대전청사가 대전지역에 미친 이전 효과를 분석하였다.
- 정부종합청사의 입주는 대전의 건설과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IMF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건설경기가 얼어붙었던 98년 이후에도 대전만은 유독이 건설경기가 호황을 누렸다.
- 정부대전청사는 대전에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대전을 명실공히 제2행정수도로 도약케 했으며, 대전 시민들의 제2행정수도의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함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다.
- 대전으로 이전한 현 대전정부청사에 근무하는 종사자수는 모두 4,324명이며, 이들 종사자의 2003년도 전체 인건비(소득) 규모는 1,969억 7,3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전체 소득액 가운데 지역내에서 소비되는 비율이 약 81.7%로 나타났으며, 2003년도 한 해 동안 대전정부청사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대전지역에서 지출한 소비지출 규모는 1,609억 2,700만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따라서 대전정부청사의 대전이전으로 대전지역에는 공공부문 종사자수가 신규로 4,246명 증가하고, 청사이전에 따른 신규 지역내 소득증가의 발생과 이에 따른 최종수요에 해당하는 신규 소비지출 규모가 증가하는 등 정부대전청사의 이전은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2003년 11월말 현재 기준 종사자수 및 인건비(소득)를 기준으로 한 직접고용효과는 4,246명이며, 지역내 타산업부문에 미친 간접고용효과 6,984명을 합한 총고용효과는 11,230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청사이전에 따른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직접생산효과는 1,876억4,300만원이며, 간접생산효과는 공공부문 고용증가에 따른 생산증가가 타산업분야에 간접으로 미친 생산유발효과 1,008억5,900만원과 공공부문 소득증가에 따라 발생한 지역내 소비증가(최종수요)가 가져온 생산유발효과 2,659억4,800만원으로 이들 직접 및 간접생산효과를 합한 총 생산유발효과는 5,544억5,000만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신규 고용증가와 이에 따른 공공부문에서의 산출증가 결과 나타난 지역내 신규 부가가치 발생 총액은 공공부문으로부터 발생한 직접부가가치 975억3,700만원과 지역내 타산업부문에 미친 산출증가 결과 나타난 간접부가가치 유발액 1,906억6,600만원을 합한 지역내 총부가가치 유발액 2,882억300만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그러나 정부대전청사가 고용창출, 소득증대에 따른 세수증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대전지역을 발전시켰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정부기관의 핵심기능을 서울에 남겨둔 데서 오는 번거로움과 낭비요소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 정부대전청사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지역발전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공공기관의 나 홀로 이전만이 이루어졌을 뿐 유관기관의 이전은 그리 많지 않았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 그 자체로서의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시키는 데는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향후 대전시는 대전의 문화인프라의 구축, 청사공무원들의 대전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대전시민으로서의 자부심 함양,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대비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이며, 쾌적한 환경친화적 도시, 우수한 교육여건이 구비된 교육·연구도시, 종합 행정중심도시로서 발전시켜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광주광역시, 중앙부처 및 정부투자기관 광주유치방안, 2003. 3.
- 김광익, 수도권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지방분산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1999.
- 김용웅, 차미숙, 지역개발사업의 파급효과 분석기법 및 적용 연구, 국토연구원, 2001.
- 김홍태, 둔산신도시개발 평가 및 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2002.
- 대전일보, 대전정부청사 이주 5년, 2003. 8. 23-26일자
- 대한매일, 대전청사 5년, 2003.6. 26-7.1일자
- 대한주택공사, 주거복지백서 - 주택정책의 계층성 평가를 중심으로 -, 2002. 9.
- 박헌주 김광익, 수도권정책의 현안과제와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1997.
- 전라남도, 남학신도시 사업추진전략, 2002.

일련번호		

---

## 정부대전청사의 “대전이전에 따른 효과분석” 을 위한 설문조사서

---

안녕하세요?

금번 저희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국토의 균형발전차원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정부대전청사의 이전효과분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설문조사는 대전청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및 그 가족 분들을 대상으로 대전청사의 이전효과에 대해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익명으로 통계처리됩니다. 따라서 바쁘시더라도, 대전청사 및 대전시에 대해 평소 느끼고 계신 바를 솔직히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본 조사에 대한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조사주관기관 : 대전발전연구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 대전시청 20층)

☎ (042) 471 - 5622 / 연구자 : 문경원



※ 아래 질문을 잘 읽어 보시고, 선생님의 견해와 일치하는 내용에 ○나 ✓ 표시를 하나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직접 기재하여 주십시오. ♣

**먼저, 현재의 출근형태 및 주거유형 등에 대해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 1) 평소 정부대전청사로 출근시 주요 통근수단은 다음중 무엇입니까? (공무원 가족분의 경우 출근하시는 분의 주된 출근수단은 무엇입니까?)

- (1) 도보                                      (2) 승용차 (자가용)                      (3) 대중교통  
 (4) 통근·통학버스                            (5) 기차                                      (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 2) 통근에 따른 소요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 가족분의 경우 출근하시는 분의 주된 출근소요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소요시간 ( \_\_\_\_\_ 시간 \_\_\_\_\_ 분)

문 3)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은 다음중 무엇입니까?

- (1) 단독주택                      (2) 다가구 주택                      (3) 연립주택(빌라 포함)  
 (4) 공무원 아파트 (5) 공무원용외의 일반아파트 (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b>참고</b>	(1) 단독주택 : 다른 세대와 전혀 같이 살지 않는 주택 (2) 다가구주택 : 동일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사나, 집주인이 한 사람밖에 없음 (3) 연립(빌라) : 동일 건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집(독립된 소유권 인정)
-----------	---

문 4)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주거형태는 무엇입니까?

- (1) 자가소유                                      (2) 전세                                      (3) 월세  
 (4) 하숙·자취 등                              (5)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다음으로, 정부대전청사의 대전이전 및 관련효과 등과 관련된 사항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 5) 정부대전청사가 대전으로 이전하기 직전 귀하의 거주지는 보기중 어디이셨습니까?

- (1) 서울                                      (2) 인천                                      (3) 경기  
 (4) 대전                                      (5) 충남·북                                      (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 6) 그렇다면, 현재 귀하의 거주지는 보기중 어디입니까?

- (1) 서울 → 문 7)번으로
- (2) 인천
- (3) 경기
- (4) 대전 → 문 8)번으로
- (5) 충남·북
- (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다음 페이지 문 14)번으로

문 7)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통근하시는 주 이유는 보기 중 무엇입니까?

- (1) 가족이나 배우자의 직장관계로
- (2) 자녀의 교육문제 때문에
- (3) 서울 및 수도권으로 업무를 보러 가는 경우가 더 많아서
- (4) 대전에 따로 주택을 구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 (5) 대전의 문화·복지시설이 좋지 않아서
- (6) 부모님 등을 모시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 (7) 통근에 불편을 느끼지 않아서
- (8)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 위의 문7번에 응답하신 분 → 다음 페이지 문 13번부터 계속 응답

문 8) 정부대전청사가 대전으로 이전한 이후에 대전으로 이주하신 것이 맞습니까?

- (1) 맞다 → 문 9)번으로
- (2) 정부대전청사 이전 전부터 대전에서 거주 → 문 14)번부터 응답!

문 9) 대전으로 이사하신 가장 큰 이유는 보기 중 무엇입니까?

- (1) 직장과의 거리
- (2) 대전의 교통이 편리해서
- (3) 교육환경의 양호
- (4) 낮은 주택가격
- (5) 문화생활 및 쇼핑 여건 양호
- (6) 주차의 편리
- (7) 환경/경관의 양호
- (8)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 10) 다른 지역은 제외하고라도, 다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이주하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 (1) 없다 → 문 11)번으로
- (2) 여건이 허락하면 수도권으로 이사하고 싶다 → 문 10-1)번으로
- (3) 직장변동시 수도권으로 이사할 것 같다
- (4) 아직 잘 모르겠다 → 문 11)번으로

문 10-1) 서울 및 수도권으로 다시 이사를 하실 의사가 있는 주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직장변동의 가능성
- (2) 수도권에 비해 불편한 대중교통
- (3) 수도권에 비해 대전의 교육환경이 불량
- (4) 대전의 부동산 투자가치가 낮음
- (5) 수도권에 비해 대전의 생활·문화·쇼핑여건 불편
- (6) 수도권에 비해 대전이 환경·경관이 불량
- (7) 가족과의 관계 등
- (8)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문 11) 귀하의 직장이 대전청사로 이동하면서, 귀하의 가족분들과 대전으로 같이 이주하셨습니까? 아십니까?

- (1) 가족 모두 이주 → 문 11-1)번으로
- (2) 가족중 일부만 이주 → 문 11-2)번으로
- (3) 배우자랑 단 둘이서만 이주 → 문 11-2)번으로
- (4) 혼자서만 이주 → 문 12)번으로

문 11-1) 현재 거주하는 대전으로 가족모두 이사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직장과의 거리를 단축하기 위해
- (2) 대전이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
- (3) 대전이 교육환경 양호하기 때문
- (4) 대전이 주택가격이 저렴하기 때문
- (5)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 (6) 다른 지역에서 통근하기 싫어서
- (7) 대전이 환경·경관이 양호하기 때문
- (8) 가족과의 공유시간 확대를 위해
- (9) 문화생활과 쇼핑여건이 좋아서
- (10)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위의 문 11-1)번에 응답하신 분 → 아래 문 11-3)번부터 계속 응답!

문 11-2) 대전으로 가족 일부만 이주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자녀의 교육문제
- (2) 배우자나 다른 가족의 직장문제 때문
- (3) 이주의 편의상
- (4)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 위의 문 11-2)번에 응답하신 분 → 아래 문 11-3)번부터 계속 응답!

문 11-3) 가족 모두가 일부만 이사하셨다면, 대전으로 이사에 참여한 가족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 본인포함 총 \_\_\_\_\_명 이주

문 12) 서울 및 수도권에 대비한 대전시에서의 생활상 장점은 보기중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1)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가격      (2) 출·퇴근 시간의 감소
- (3) 가족과의 공유시간 확대          (4) 대전이 교통요충지에 따른 전국 관광기회의 확대
- (5) 쾌적한 생활환경                  (6) 생활비 절감에 따른 경제적 여유로움
- (7)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문 12-1) 정부대전청사의 대전이전에 따른 생활에서 불편한 점이나 단점은 보기중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1) 교육기회 부족                                  (2) 여가 오락공간의 부족
- (3) 문화예술 향유 기회부족                      (4) 쇼핑의 불편함
- (5)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6) 불편사항 없음

문 13) 정부대전청사의 대전이전에 따른 업무에서 불편한 점이나 단점은 보기 중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1) 서울로의 출장시간 과다                      (2) 통근시간의 과다
- (3) 가족과의 별거                                  (4) 지방근무에 따른 소외감
- (5) 결제 지연 등 업무처리시간의 과다      (6) 서울과 대전 양 지역의 주거 및 생활비 부담
- (7)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8) 불편사항 없음

문 14) 정부 대전청사의 대전이전에 따른 대전시 지역에 미치는 효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보기 중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1)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산업성장에 따른 지역 상권확대
- (2) 대전시 교육수준의 상승
- (3) 대전시 인구의 증가
- (4) 대전시 재정수입의 확대
- (5) 대전시의 고용기회 확대
- (6) 대전시 부동산 가격의 상승
- (7) 대전시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 (8)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문 15) 정부 대전청사의 대전이전에 따라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대전청사이전의 소기 목표 중 가장 크게 달성한 목표는 보기 중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1) 수도권 인구분산
- (2) 국토균형발전
- (3) 청 단위기관의 집중배치에 따른 업무능률 향상
- (4) 대 국민편의제공
- (5)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문 16) 다음은 정부대전청사의 대전이전에 따른 공무원의 급여가 대전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함입니다. 귀하의 월급여의 지출사항을 대전시내 및 대전시외 지역별, 그리고 지출내역별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총 100%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 분		비 율 (%)
16-1) 대전 시내에서의 지출	16-1-1) 대전시내에서 지출되는 음·식료품비 비율은?(외식비 포함)	월급여의 대략( )%
	16-1-2) 대전시내에서 지출되는 교육비 비율은?	월급여의 대략( )%
	16-1-3) 대전시내에서 지출되는 문화·여가비 비율은?	월급여의 대략( )%
	16-1-4) 대전시내에서 지출되는 주거·광열·의류비 비율은?	월급여의 대략( )%
	16-1-5) 대전시내 금융기관에서의 “저축”비율은?	월급여의 대략( )%
	16-1-6) 대전시내에서 지출되는 기타 지출비율은?	월급여의 대략( )%
16-2) 대전시외에서의 지출	대전시외(충·남북, 수도권 등 모두 포함)에서 지출되는 모든 지출 비율은?	월급여의 대략( )%
<b>합 계</b>		<b>총 100 %</b>

**다음은 향후 대전시의 도시개발방향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관련 사항 등에 관해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 17) 정부 및 산하기관의 지방이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1) 매우 필요하다
- (2) 필요한 편이다
- (3) 보통이다
- (4) 약간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 (6) 잘 모르겠다

문 18) 정부 및 산하기관의 지방이전이 수도권 과밀화해소와 지방의 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 (1) 매우 도움이 된다
- (2) 도움이 되는 편이다
- (3) 보통이다
- (4)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 (5)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6) 잘 모르겠다

문 19) 대전청사로 이전한 공무원들에 대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기 중 어떤 방향으로 우대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 (1) 현직 근무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담 완화
- (2) 현직 근무시 급여상의 인센티브 부여
- (3) 현직 근무시 인사상의 인센티브 부여
- (4) 퇴직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등 지역발전에 기여유도
- (5) 대전시 생활여건의 지속적 편리화 도모
- (6)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 (7) 특별한 지원이 필요 없음

문 20) 향후 대전시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도시개발의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1) 쾌적한 환경친화적 주거도시
- (2) 우수한 교육여건이 구비된 교육·연구도시
- (3) 첨단산업이 중심이 된 첨단산업도시
- (4) 종합 행정중심도시
- (5) 문화예술의 도시
- (6) 국토의 중심성을 살린 교통요충도시
- (7)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다음은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분류를 위해 몇가지만 더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 2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 (1) 남자
- (2) 여자

문 22) 귀하는 보기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1) 대전청사근무 공무원
- (2) 대전청사 근무 공무원 가족

문 23)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만 연령 기준)?

- (1) 20세 ~ 29세
- (2) 30세 ~ 39세
- (3) 40세 ~ 49세
- (4) 50세 ~ 59세
- (5) 60세 이상

문 24) 선생님 닥의 가구원 수는 몇분이나 됩니까?    본인을 포함해서 \_\_\_\_\_명

문 25) 귀하의 자녀 중 현재 교육 중에 있는 학생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 (1) 없다                                    (2) 유치원 (     )명                                    (3) 초등학교 (     )명  
(4) 중학교 (     )명                    (5) 고등학교 (     )명                                    (6) 대학 이상 (     )명

문 26) 귀하, 혹은 공무원이신 귀하 가족분의 직렬(업무분야)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 (1) 일반직                                    (2) 기술직                                    (3) 전문직  
(4) 별정직                                    (5) 기능직                                    (6) 기타

**\* 대전시 발전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행복한 시간이 되세요 ♥**

## 정부대전청사의 이전 효과 분석

---

발행인 : 한 연 등  
발행일 : 2003년 12월 31일  
발행처 : 대전발전연구원  
          우) 302-78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  
          (대전시청 20층)  
          전화 471-5622, 팩스 471-3615  
인쇄처 : 신진기획 (042)638-7887

---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진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I. 서 론

---



## Ⅱ. 정부대전청사의 일반적 현황

---

### Ⅲ. 정부대전청사 이전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 IV. 정부대전청사의 이전효과

---

## V. 결 어

---

## ▶ 설문조사서

---